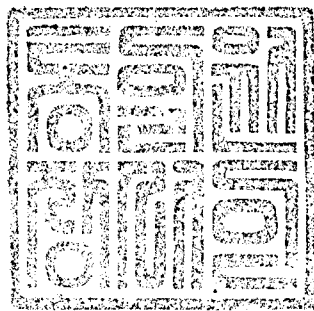


# 南北韓 軍縮관련 主要提議

— 1980年 以後 —

1990. 7.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 目 次 〉

1. 우리측의 軍縮관련 提議內容

- 1982. 1. 22, 全大統領 국정연설,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천명시 『남북한기본관계 잠정협정』 締結제의 ..... 5
- 1982. 2. 1, 국토통일원장관 對北聲明, 『20개시범 실천 사업』 提議 ..... 6
- 1985. 8. 15, 全大統領 광복절40주년 慶祝辭, “當局間 會談에서 「불가침문제」 討議·解決” 천명 ..... 6
- 1987. 8. 3, 外務部 성명, 「남북외무장관회담」 提議 ..... 7
- 1988. 6. 10, 유엔 제3차 軍縮특별총회 外무부장관 演說 ..... 8
- 1988. 10. 18, 盧泰愚대통령 제43차유엔총회 演說, 「남북정상회담」 討議 議題 ..... 9
- 1989. 2. 8, 南北高位級會談 제1차예비회담 우리측 提示 議題 ..... 10
- 1989. 9. 11, 盧泰愚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시 南北聯合體制 구성제의 ..... 11

- 1990. 6. 7, 盧泰愚대통령, 韓美頂上會談후 가진 「워싱턴」  
記者會見 ..... 12

## 2. 북한측의 軍縮관련 提議內容

- 1980. 10. 10, 제6차黨大會 金日成보고,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관련 統一國家 『10대시정방침』 提示 ..... 13
- 1984. 1. 10, 中央人民委員會 · 最高人民會議상설회의  
聯合會議, “서울당국과 미정부 및 의회에 보내는 편지”  
採擇 ..... 15
- 1985. 4. 9, 最高人民會議 제7기 4차회의, 「남북국회회담」  
提議관련 議題 ..... 16
- 1986. 6. 17, 人民武力部長 오진우 對南便紙(6.9자),  
「3 군사당국자회담」 提議 ..... 17
- 1986. 6.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聲明, 『조선반도  
비핵지대 · 평화지대』 창설협상 提議 ..... 18
- 1987. 1. 11, 政務院總理 · 人民武力部長 명의를 對南便紙,  
「남북고위급 정치 · 군사회담」 提議 ..... 19

- 1987. 7.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聲明, 남-북한 ·  
미국참가 「다국적 군축협상」 提議 ..... 20
- 1988. 7. 20, 最高人民會議상설회의 採擇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남북국회연석회의」 提議 ..... 21
- 1988. 11. 7, 中央人民委員會 · 最高人民會議상설회의 ·  
政務院 연합회의,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 提議 ..... 23
- 1990. 5. 31, 中央人民委員會 · 最高人民會議상설회의 ·  
政務院 연합회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採擇 ..... 26
- 1990. 6. 27,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서기국장 안병수  
記者會見 ..... 29
- ※ 북한측의 협상방식관련 태도변화 추이 ..... 31

### 3. 북한측 軍縮방안 內容對比 (표)

..... 35

## ＊ 부 록

- 1) 우리側 제의내용 全文 ..... 45
- 2) 北韓側 제의내용 全文 ..... 66
- 3) 南北軍縮관련 주요 報道內容 ..... 141

# 1. 우리측의 軍縮관련 提議內容

○ 1982. 1. 22, 전대통령 국정연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시

『남북한기본관계 잠정협정』체결제의

〈 남북한관계 正常化 촉구 〉

- 남북쌍방간에 統一憲法 마련을 위한 歷史的 作業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信賴造成 및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統一沮害要因 해소 必要
- 따라서 남북쌍방은 그동안의 民族自害的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중지부를 찍고, 하루속히 民族自愛的인 정상관계로 轉換
-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本人은 남북쌍방이 상호관계를 正常化한 기초위에서 統一을 이룩할 때까지의 實踐措置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을 提議

〈 「잠정협정」 7個項中 관련부분 〉

- 둘째, 쌍방은 모든 형태의 武力 및 暴力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止揚, 모든 문제를 상호 對話·協商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解決
- 넷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緊張緩和와 戰爭防止를 위하여 현존 休戰體制를 유지하면서 軍備競爭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解消措置를 협의

○ 1982. 2. 1,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20개시범실천사업』 제의

〈 남북간 緊張緩和관련 4개항 〉

○ 우리 政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實踐精神에 입각, 우선 당장에라도 다음과 같은 示範事業들의 실천을 북한당국에 要求

17) 非武裝地帶내에 共同競技場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간의 親善競技에 이용

18) 非武裝地帶내의 동식물의 自然生態系를 연구하기 위하여 共同學術調査 실시

19) 남북간에 軍事的 緊張을 완화하기 위하여 非武裝地帶내의 軍事施設 완전철거

20) 남북간에 軍備統制措置를 협의하며 쌍방 軍事責任者간 直通電話 설치·운용

○ 1985. 8. 15, 전대통령 광복절40주년 경축사, “당국간 회담에서

「불가침문제」 토의·해결” 천명

〈 「상호불가침문제」 등 협의촉구 〉

○ 平和와 統一을 위한 南北韓關係의 확고한 기초마련을 위해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侵犯하지 않을 것을 굳게 約束하고 그의

## 실현을 위한 具體的 措置 강구

- 「상호불가침」의 명제는 6천만 우리겨레 모두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至上의 課題
- 우리나라의 憲法은 평화적 통일을 前文에 명시하고 모든 침략적 戰爭을 부인함으로써 「불가침」을 國家最高意思로 민족과 세계에 宣言
- 남북한의 두당국간에 「불가침문제」를 비롯, 남북한의 正常的 關係를 여는데 필요한 諸般事項을 하루빨리 討議·解決하자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立場
- 북한측은 近者에 남북간에 「불가침」을 宣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解決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合意事項에 대한 遵守·實踐意志의 유무여부

## ○ 1987. 8. 3. 외무부 성명, 「남북외무장관회담」제의

〈 南北韓 「불가침협정」체결문제 등 協議 〉

- 北韓側이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삼아 모든 會談을 일방적으로 中斷시킨 채 「3자군사당국자 회담」, 「3자군축협상」을 들고 나온 것은 南北韓當事者 해결원칙에 배치

○ 남북한간 軍縮問題는 남북한 유엔가입 및 주변4강의 交叉承認 등 제도적 安全裝置를 마련하고 信賴回復과 平和定着이 이룩되어야 그 實效性을 보장

○ 이러한 見地에서 <남북한 불가침협정체결>과 <유엔가입 및 교차승인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외무장관회담」 開催제의

— 既存對話의 재개·발전과 水資源問題의 협의·해결 등 信賴構築 문제

—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 및 平和定着 위해 軍縮을 포함한 제반 문제

— 南北總理會談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 남북한당국 最高責任者 會談 실현문제 등 협의

※ 南北韓외무장관이 유엔총회 참석기회를 이용, 總會開催 직 후부터 9월말사이 뉴욕 또는 상호 편리한 장소에서 會同

○ 1988. 6. 10, 유엔 제3차 군축특별총회 외무부장관 연설

< 韓半島 軍縮을 향한 3 단계接近方案 제시 >

○ 우리는 1950년대초 참혹한 戰爭을 겪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軍事力의 사용을 특히 혐오하며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굳게 확신하고 있는 바, 軍縮을 진전시키고 平和를 추구하겠다는 강한 意圖 보유

- 본인은 포괄적 完全軍縮이라는 궁극적 目標達成을 위해 유엔체제하에서 진행되어온 「多者軍縮協商」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支持를 강조
- 우리는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軍縮은 남북한간의 信賴回復과 協力을 이루기 위한 段階的 措置로만 가능하다는 基本認識하에 『한반도군축을 향한 3단계접근방안』을 제시
  - 첫째, 남북한간의 조속한 對話再開와 후속조치 및 協力擴大를 통해 상호 信賴構築
  - 둘째, 敵對行爲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保障裝置로서 남북한은 「불가침협정」체결에 合意
  - 셋째, 그러한 다음 남북한은 韓半島軍縮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具體的 措置에 관하여 協商

○ 1988. 10. 18, 노태우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남북정상회담」

토의 의제

〈 不可侵문제 · 軍縮문제 등 論議 〉

- 南北頂上會談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相互信賴와 安全保障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共同으로 宣言할 것을 제의
- 이 問題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에라도 北에 대하여 먼저 武力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宣言

- 이 會談에서 한반도의 平和定着을 가능케 하는 制度的 裝置와  
統一實現方案, 남북간의 交流協力, 軍備縮小 등 군사문제포함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 論議, 妥結
- 休戰協定을 항구적인 平和體制로 대체하는 구체적 方案도 강  
구

○ 1989. 2. 8,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예비회담 우리측 제시의제

〈 首席代表 첫 발언 〉

- 南北頂上會談이 개최되면 통일실현문제와 「불가침선언」을 비  
롯, 한반도의 平和定着을 가능케 하는 制度的 裝置 및 軍備縮  
小 등의 군사문제 論議, 妥結 가능
- 따라서 우리는 本會談 議題를 다음과 같은 6개항으로 提示

  - 1) 상호 誹謗·中傷 중지문제
  - 2) 相互尊重 및 不干涉 문제
  - 3)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 실시문제
  - 4) 軍事的 信賴構築 문제

  - 남북고위軍事當局者間的 直通電話 가설
  - 非武裝地帶의 비무장화 및 平和的 이용
  - 軍人士의 상호교류

- 大規模 훈련의 事前通報 및 參觀 초청
- 5)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 6) 其他 쌍방이 提起하는 문제

○ 1989. 9. 11, 노태우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천명서  
남북연합체제 구성제의

〈「남북연합」기구 설치〉

- 統一을 촉진할 過程을 制度化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憲章에 따라 南北이 聯合하는 機構設置 필요
- 南北聯合은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설치
-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總理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閣僚級 委員으로 구성, 그 안에 〈인도·정치외교·경제·군사·사회문화〉분야 등의 常任委員會 설치

〈「군사분야」전담기구 役割〉

- 과도한 軍備競爭을 지양하고 武力對峙狀態 해소를 위해 군사적 信賴構築과 軍備統制 실현
- 현재의 休戰協定體制를 平和體制로 바뀌어나가는 문제 등 協議

※ 「민족공동체헌장」채택을 통해 平和와 統一을 위한 基本方案, 相互不可侵에 관한 사항, 南北이 聯合하는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해 포괄적으로 合意할 것을 제의

○ 1990. 6. 7. 노태우대통령, 한미정상회담후 가진 「워싱턴」기자회견

〈 軍縮 및 駐韓美軍관련 언급 〉

- 韓半島에서의 軍縮實現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당국의 責任者끼리 만나 상호 信賴를 造成하는 것이 필요
- 北韓이 진정으로 武力統一攻勢 전략을 拋棄하고 또한 그것을 確認·信賴할 수 있는 단계에서 우리의 軍事力과 駐韓美軍 조정가능

## 2.北韓側의 軍縮관련 提議內容

○ 1980. 10. 10, 제6차당대회 김일성보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관련

통일국가 『10대시정방침』 제시

〈 일곱째, 軍事的 대치상태 해소 및 民族聯合軍 조직 〉

- 북남간 軍事的 對峙狀態를 끝장내고 同族相殘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軍隊 각각 10만~15만명으로 縮小
  - 軍事分界線 철폐, 軍事分界선일대 모든 軍事施設物 제거
  - 북과 남의 民間軍事組織 해산, 民間軍事訓練 금지
  
- 朝鮮人民軍과 南朝鮮國軍을 통합, 단일한 民族聯合軍 조직
  - 民族聯合軍은 연방정부의 統一的지휘밑에 祖國保衛任務 수행
  - 民族聯合軍 유지 및 祖國保衛에 필요한 모든 經費는 북과 남이 共同負擔

〈 아홉째, 두 地域政府 對外活動의 통일적 調節 〉

- 統一以前 다른 나라들과 一方的으로 맺은 軍事條約을 비롯, 民族的 團合에 배치되는 모든 條約·協定 폐기

〈 열째, 평화애호적인 對外政策 실시 〉

- 統一朝鮮은 국제적인 그 어떤 侵略行爲에도 不加擔·不協力
  
- 聯邦國家의 영토에 다른나라 軍隊駐屯, 다른나라 軍事基地 설치 不許容

- 核武器 생산 · 반입 및 사용금지, 朝鮮半島의 영원한 平和地帶化 · 非核地帶化

※ 北韓의 高麗聯邦制 『10대시정방침』은 越南에서의 소위 “남베트남 민족통일전선 (「베트콩」)”결성시 채택한 『10大綱領』과 유사

베트콩 『10대강령』 (60. 12. 20)	북한 『10대시정방침』 (80. 10. 10)
○ 1항, 민족민주연합정부수립 - 식민주의, 『디엠』정권 타도 (전제조건)	○ 1항, 민족자주성 견지 - 남조선과쑤정권 타도 (전제조건)
○ 2항,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도 실현	○ 2항, 민주주의 실시
○ 3항, 자주경제건설, 국민생활 개선	○ 3항,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 4항, 감세(減稅)실시	○ 6항, 공정한 세금제도 실시
○ 5항, 민족적 · 민주적 문화 건설	○ 4항, 민족문화 · 민족교육 발전
○ 6항, 민족군대의 건설	○ 7항, 민족연합군 조직
○ 7항, 해외동포의 권리보장	○ 8항,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 · 이익 옹호 · 보호
○ 8항, 평화 · 중립외교 실행	○ 8항, 중립노선 견지, 「블럭」불가담정책 실시
○ 9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	○ 전문(前文)
○ 10항, 침략전쟁 반대	○ 10항, 국제적 침략행위에 불가담 · 불협력

- 1984. 1. 10,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연합회의, “서울당국과 미정부 및 의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

〈「3자회담」 개최제의 〉

- 美國은 朝鮮停戰協定の 條約일방일 뿐 아니라, 南朝鮮에 자기 軍隊 주둔 및 모든 軍事統帥權 장악
  - － 북남간 군사적 對峙狀態解消 · 緊張狀態緩和 위해 우선 美國과 問題解決 필요
- 美 · 北韓간 회담에 조성된 緊張狀態와 직접 관련있는 〈서울당국〉도 同等資格으로 참가 인정

〈「3자회담」 토의의제 〉

- 朝鮮停戰協定 條約쌍방인 美 · 北韓間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
  - － 朝鮮戰爭의 종결을 法的으로 公式宣布
  - － 停戰을 公고한 平和에로 전환, 모든 外國軍隊撤去
  - － 其他 公고한 平和保障 조건에 관한 問題 포함
-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
  - － 서로 相對方을 반대하는 武力不行使
  - － 軍備를 縮小할 데 대한 問題 포함
- 그밖에 美國과 서울당국이 提起하는 문제들도 討議 가능

※ 「불가침 관련 북한측 用語定義 (『정치용어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 “불가침조약은 제국주의의 침략책동과 관련하여 있게 된다, ...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준비를 가리우거나 침략준비를 위한 하나의 외교적 수단으로 불가침조약을 꾸며 낸다.”
- “... 사회주의나라가 제국주의나라들과 체결하는 불가침조약은 제국주의나라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자기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된다.”

○ 1985. 4. 9, 최고인민회의 제7기 4차회의, 「남북국회회담」제의관련 의제

〈「남북불가침 공동선언」발표〉

- 「3자회담」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緊張緩和와 平和에 도움이 되는 문제를 民族끼리 마주앉아 解決
- 쌍방 國會會談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
  - 雙方當局이 이를 구체화하여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實質的 도움 提供
- 「남북국회회담」은 우리나라에서 공고한 平和保障을 위한 「3자회담」의 실현도 促進

※ 남북한의 「불가침」 관련 제의내용 비교

우 리 측 (74. 1. 18, 박대통령 연두회견)	북 한 측 (84. 1. 10, 「3자회담」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li> <li>○ 상호 내정불간섭</li> <li>○ 여하한 경우에도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 존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불행사</li> <li>○ 군사훈련중지 · 주한미군철수</li> <li>○ 미 · 북한간 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군대 철수</li> <li>- 군비축소</li> </ul> </li> </ul>

○ 1986. 6. 17,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대남편지 (6.9자), 「3 군사당국자회담」 제의

〈 토의의제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人民武力部長과 대한민국 國防部長官, 남조선주둔 聯合國軍總司令官이 참가하는 軍事當局者會談에서 戰爭危險을 막고 緊張狀態를 완화하기 위한 絶실한 問題 협의
  - 해결
    - 軍事演習과 武力增強을 中止하는 문제

- 兵力과 軍備를 縮小하는 문제
- 朝鮮停戰協定을 原案의 요구대로 遵守하는 문제
- 其他 조선반도의 緊張緩和에 도움이 되는 韓·美側이 제기하는 問題들도 함께 討議 가능

○ 1986. 6.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조선반도 비핵지대·평화지대』 창설협상 제의

〈 한반도 非核·平和地帶化에 대한 북한측 立場 〉

-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는 핵무기의 試驗과 生産, 貯藏과 搬入을 하지 않으며 外國의 核基地를 포함한 모든 軍事基地의 설치를 不許
  - 外國核武器들의 領土·領空·領海 통과 不許
- 둘째로, 조선반도를 非核地帶·平和地帶로 만드는데 대한 朝鮮 人民과 세계평화애호 人民들의 염원에 맞게 南朝鮮에 대한 새로운 核武器搬入 중지
  - 이미 搬入한 모든 武器들을 단계별로 縮減, 완전철수
  - 朝鮮半島에서 核武器使用 관련 모든 作戰計劃取消 위한 조치 강구
- 셋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는 美國政府와 南朝鮮當局이 조선반도를 非核·平和地帶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提議

와 관련, 그 어떤 協商이 필요하다면 그 協商의 形式에 구애됨  
이 없이 그 어느때나 呼應

○ 1987. 1. 11, 정무원총리·인민무력부장 명의의 대남편지,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제의

〈 토의의제 〉

- 北南高位級 정치군사회담에서는 7.4共同聲明에서 천명된 祖國  
統一 3대원칙의 재확인 기초위에 북남사이의 政治的 대결상태  
· 軍事的 긴장상태를 緩和하기 위한 對策協議
- 當面한 정치적 對決狀態를 해소하기 위한 對策
  - 호상 誹謗·中傷 중지문제
  -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 合作·交流를 실현, 民族的 유대를  
도모하는 문제
- 軍事的 긴장상태완화 위한 當面措置
  - 武力縮小 및 軍備競爭 중지문제
  - 軍事分界線 비무장지대의 平和地帶化 및 큰 규모의 軍事演習  
중지문제
- 이와 함께 中立國監督委員會의 권능제고 問題 및 中立國監視軍  
조직문제 협의

○ 1987. 7.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남-북한·미국참가  
「다국적 군축협상」제의

〈 大規模 단계적 武力縮減을 실현할데 대한 提案 〉

- 첫째, 북과 남의 武力均衡은 서로 武力增強 방법이 아니라 서로 武力縮減方法으로 유지
  -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武力縮小
  -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 兵力維持
- 둘째, 북과 남의 兵力이 먼저 단계적으로 縮小되는데 따라 남조선주둔 美軍도 단계적으로 撤收
  - 北南兵力이 10만으로 축소되면 美國은 남조선에서 核武器 포함 모든 武力撤收·軍事基地 철폐
- 셋째, 북과 남은 각기 자기측 武力縮小정형을 상대측에 통지, 美國은 자기군대 철수정형을 북측에 通知 (각기 世界에 公布)
  - 「중감위」는 北南武力縮小·美軍撤收정형 확인 위한 檢證事業을 단계별로 進行
- 넷째, 북과 남의 兵力縮小기간과 그 이후에도 있을수 있는 武力衝突 위험성 防止 및 평화유지를 위해 軍事分界線 비무장지대를 平和地帶化, 中立國監視軍 주둔
- 다섯째, 朝鮮의 북과 남, 美國 및 「중감위」代表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多國的 軍縮協商」진행 (1988년 3월, 제네바)

- 朝鮮半島에서의 武力縮小와 撤收 및 그에 대한 檢證問題
- 군사분계선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로의 전환문제
- 「중감위」의 權能擴大와 中립국감시군 組織 및 그 配置문제  
토의

※ 北韓政府는 동제의시 韓半島에서 실제적인 武力縮小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1987년말까지 人民軍 10만명을 일방적으로 減縮하겠다는 입장 宣布

- 1988. 7. 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채택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남북국회연석회의」 제의

〈 토의의제 〉

- 國會連席會議에서는 북과 남의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하는 문제토의
- 나라의 緊張狀態를 완화하고 平和를 保障하는데 유익한 남측이 제기하는 問題도 함께 討議

※ 不可侵問題의 성과적추진을 위해 『北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초안)』동봉

〈 북남불가침 공동선언(초안) 〉

- 北南國會連席會議는 조선반도의 緊張狀態緩和, 戰爭防止, 平和保障을 위해 쌍방당국간 不可侵宣言 채택의 必要性和 절박성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宣言

- 1) 북과 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相對方을 반대하는 武力不使用, 武力으로 상대방 不侵害
  - 2) 북과 남은 完全統一을 이룩할 때까지 意見相異와 紛爭問題를 대화·협상을 통해 平和的으로 해결
  - 3) 북과 남은 相對方에 대한 外國의 侵略이나 무장간섭행위에 不加擔·不協調
  - 4) 북과 남 사이의 不可侵 境界線은 1953. 7. 27부 조선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現 軍事分界線으로 확정
  - 5) 북과 남은 서로 武力의 단계적 大幅縮小 및 조선반도주둔 外軍·核武器의 단계적 撤去措置 강구
  - 6) 북과 남은 現 非武裝地帶를 완충지대로 하고 武裝衝突과 紛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그 안에 中立國監視軍 주둔
  - 7) 北南不可侵宣言은 북과 남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條約·協定에 不制約
- 「북남국회연석회의」는 이상과 같은 事項을 구체화하여 「북남불가침선언」을 採擇할 것을 쌍방당국에 委任

○ 1988. 11. 7,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정무원 연합회의,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 제의

〈 1. 단계적 美軍武力 철수와 북남간 軍縮方案 〉

1) 美軍武力의 단계적 撤收

① 핵무기 철수 :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

-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 배치 핵무기 철수
-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철수

②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철수 :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

-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 및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 부산·진해계선(界線)으로 일단 철수
-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전체를 남조선에서 완전 철수
-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공군 전체철수

③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불 투입, 군사장비 불제공

④ 미국은 남조선에서 철수하게 될 핵무기포함, 일체무기와 전투기술기재 남조선 불양도

2) 北南武力의 단계적 縮減

① 북과 남은 서로 병력축감방법으로 무력균형 유지 :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

- 1989년말까지 40만명
- 1990년말까지 25만명
- 1992년말까지 10만명이하로 유지

- ② 북과 남은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 단계별 축감
  - 핵무기·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폐기
  - 무력축감시작후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반입 중지
- ③ 북과 남은 무력축감 시작후 6개월안에 모든 민간군사조직 해체

### 3) 美軍武力철수·北南武力축감에 대한 通報·檢證

- ① 미국은 미군무력 철수정형을 북측에 통지, 북남무력 축감정형은 북남이 각각 상대측에 통지 (내용공개)
- ② 판문점 「중감위」권능확대, 미군무력 철수정형·북남무력감축정형 확인위한 검증사업 진행

### 4) 北과 美國, 南朝鮮사이의 「3자회담」

- ① 조선인민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 진행, 그 테두리내에서 조미, 북남간 쌍무회담도 가능
- ② 「3자회담」에 「중감위」대표 (폴란드·체코·스위스·스웨덴) 들이 방청으로 참가
  - 단계적 미군무력철수와 북남무력축감에 대한 검증문제, 「중감위」권능 확대문제 토의
- ③ 「3자회담」에서 미군무력철수·북남무력축감 문제합의에 기

초, 미·북한간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간 불가침선언으로 확  
인·고착

〈 2. 當面한 정치·군사적 對決狀態 완화방안 〉

1) 政治的 대결상태의 緩和

- ① 북과 남은 호상 비방중상 중지
- ② 북과 남은 상대방 비난·대결고취 정치행사중지 및 상대방 체제부정법규 철폐
- ③ 북과 남은 다방면적인 합작·교류 실현

2) 軍事的 대결상태의 緩和

- ① 북과 남은 쌍방 무력의 대치상태해소 위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비무장지대에 중립국감시군 배치
-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 전후방에서 연합부대이상의 군사훈련 중지
  - 규모여하를 막론, 외국군대와외의 합동군사연습 일체 중지
- ③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해상·육상 및 공중에서 무력 충돌 가능한 일체 군사행동 중지
- ④ 북과 남은 우발적 충돌사건 확대방지를 위해 쌍방 고위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

3) 北南사이의 고위급 政治軍事會談

-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완화 위해 북남고위급 정치군사 회담 진행

-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는 실권있는 쌍방의 고위급 정치 군사 대표 참가
-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안에서 고위급 정치회담 · 군사회담 별도개최 가능

○ 1990. 5. 31,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 정무원 연합회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채택

〈 북남신뢰조성 〉

- 1) 북과 남은 軍事訓練과 軍事演習 제한
  - ① 外國軍隊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 · 군사훈련 禁止
  - ② 師團級이상 규모의 군사훈련 · 군사연습 中止
  - ③ 軍事分界線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 禁止
  - ④ 자기 領內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 不許
  - ⑤ 軍事演習 사전 互相通報
- 2)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非武裝地帶를 平和地帶化
  - ① 非武裝地帶안 배치 모든 軍事人員들 · 軍事裝備들 철수
  - ② 非武裝地帶안 설치 모든 軍事施設物들 해체
  - ③ 非武裝地帶를 민간인들에게 開放, 평화적 목적에 利用
- 3) 북과 남은 우발적 衝突과 그 擴大防止 위한 安全措置 강구
  - ① 쌍방 高位軍事當局者간 直通電話 설치 · 운영

- ② 軍事分界線일대에서 相對側에 대한 일체 軍事的 도발행위  
禁止

〈 북남무력축감 〉

4) 북과 남은 武力을 단계적으로 縮減

- ① 兵力縮減은 쌍방간 軍縮案 합의이후 3~4년간 3단계로 나누어 실시
- 첫단계 : 쌍방 각각 30만명선으로 축소
  - 둘째단계 : 다시 각각 20만명선으로 축소
  - 세번째단계 종료시 : 쌍방이 각각 10만명 이하수준 병력유지
- ② 段階別 병력축감에 상응, 軍事裝備들도 축소폐기
- ③ 正規武力縮減의 첫단계에서 모든 民間軍事組織·民間武力 해체

5) 북과 남은 軍事裝備의 質的更新 중지

- ① 새로운 軍事技術·裝備導入과 무장장비개발 中止
- ② 外國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무장장비 不搬入

6) 북과 남은 軍縮정형 호상通報, 檢證실시

- ① 武力縮減정형 호상 상대측에 通知
- ② 상대측지역에 대한 호상 現地視察을 통해 군축합의 履行정형 檢證

〈 외국무력의 철수 〉

7)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

- ① 남조선配備 모든 核武器들의 즉시 철수 위해 共同努力
- ② 핵무기 不生産·不購入
- ③ 核武器적재 외국비행기·함선의 朝鮮境內로의 출입·통과금지

8) 북과 남은 朝鮮半島에서 일체 外國軍隊철수 위해 共同努力

- ① 남조선주둔 美軍과 그 裝備들이 북남무력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完全撤收되도록 조치
- ② 美軍撤收에 상응하게 남조선설치 美軍事基地들도 단계적으로 撤廢되도록 조치

〈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

9) 북과 남은 軍縮과 그 이후의 平和保障 위한 조치강구

- 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中立國監視軍 배치가능
- ② 軍備統制와 북남간 있을 수 있는 군사상 紛爭問題 협의· 해결을 위해 쌍방 軍總參謀長級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구성·운영

10) 북과 남은 協商을 통해 不可侵宣言 채택, 대폭적인 軍縮에 합의

※ 其他 현 停戰狀態의 平和狀態로의 전환 강조 및 美國側에 平和協定체결 위한 「미·북한회담」이나 「3자회담」호응촉구

○ 1990. 6. 2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병수 기자회견

〈「한반도평화 군축방안」설명〉

- 지금 남조선 政界·社會界에서는 북남군사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南朝鮮當局을 비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軍縮추세도 남조선 당국자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보다 신축성 있는 軍縮方案을 提議한 것은 그들이 軍縮問題 토의에 응해나올 수 있는 좋은 契機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됨.
- 우리의 새로운 軍縮方案 역시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천명한 통일지향·남북군축·외군철수·당사자협상 등 4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서 이전의 軍縮方案과 다른 것이 없으나, 특히 注目해야 할 문제들을 몇가지 側面에서 언급하겠음.
  - ① 우리의 軍縮方案은 나라의 平和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平和問題를 최단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方途 제시  
-남조선의 不可侵條約은 남북 현상태의 상호인정·내정불간섭·무력불사용들을 약속하자고 한 것인 반면, 우리가 주장하는 不可侵宣言은 불가침의 確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北南軍縮, 外國軍隊撤收 등 원칙적 문제 明示
  - ② 새로운 軍縮方案에는 우리의 伸縮性 있는 立場 반영  
-美國과 南朝鮮이 제기하는 信賴造成問題를 받아들여 북남

신뢰조성 항목을 新設했으며, 군사연습의 事前通報·비무장지대의 平和地帶化·군사당국간 直通電話 설치 등도 남조선의 주장 고려

③ 새로운 軍縮方案은 조선반도의 緊張緩和와 平和를 실현하는데서 북과 남의 自主的 努力 강조

- 조선반도의 平和實現을 위해서는 「3자회담」을 해야 하나 美國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3자회담」 실현 노력과 함께 北南사이에서도 問題 解決方途를 적극 모색키로 결정

④ 조선반도에 대한 外國武力의 干涉과 介入을 철저히 排除

- 남조선에 있는 美軍과 核武器의 철수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의 軍事的 均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要素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폭넓게 豫見

○ 새로운 軍縮方案 발표를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軍縮問題에 대한 論議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바, 남조선 각계인사 수백 명이 조선반도의 平和統一을 위한 宣言文을 발표(6. 15)했으며, 남조선 政界上層과 當局도 이례적으로 우리의 提案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軍縮과 平和를 실현하는데서 어떠한 可能性이 열리겠는가 하는 것은 南朝鮮當局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음.

※ 북한측의 협상방식관련 태도변화 추이

구분 제의별	내 용		비 고
	의 제	회 담 형 식	
<p>1983. 10.8 북한당국, 중국주재 미대사관에 「메시지」 전달</p> <p>※ 중국외교부 경유 비공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li> <li>○ 휴전상태의 평화 상태 전환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한 및 한국간 『3자회담』 개최</li> <li>※ 『3자회담』 관련 북한측의 종전입장은 선행 『미-북한회담』을 전제로 필요할 경우에만 업저버로 한국측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자회담』</li> <li>※ 미-북한 및 한국당국간 회담</li> </ul>
<p>1984. 1.10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 “서울당국과 미정부 및 의회에 보내는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한간 평화 협정체결문제</li> <li>○ 남북불가침선언 채택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한 및 한국간 『3자회담』 개최</li> <li>※ 우리(북한)와 미국 사이의 회담에 &lt;서울당국&gt;도 동등자격으로 참가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자회담』</li> <li>※ 남-북한, 미국 당국간 회담</li> </ul>
<p>1985. 4.9 최고인민회의 제7기 4차회의 채택, “대한민국국회에 보내는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li> <li>※ 쌍방당국간 「불가침협정」 체결에 도움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국회회담』 개최</li> <li>※ 『3자회담』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긴장완화 문제를 민족끼리 마주 앉아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회담』</li> <li>※ 남의 「국회」, 북의 「최고인민회의」간 회담</li> </ul>

제의별	구분	내	용	비 고
	의 제	회 담 형 식		
1986. 6.17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대남편지(6.9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연습-무력증강 중지문제</li> <li>○ 병력-군비축소문제</li> <li>○ 정전협정 준수문제</li> </ul> <p>※ 기타 한-미측이 제기하는 문제 토의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의 인민무력부장, 남의 국방부장관 및 유엔군사령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회담』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자회담』</li> </ul> <p>※ 남-북한과 미국 3 군사당국자 회담</p>	
1986. 6.2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비핵지대- 평화지대화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 제의관련, 협상 형식에 구애받지 않음.</li> </ul>		
1987. 1.11 정무원총리-인민무력부장 대남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면한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대책</li> <li>○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위한 당면 조치</li> </ul> <p>※ 「중감위」 권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li> </ul> <p>※ 부총리급을 단장, 군총참모장급을 부단장으로 하는 당국자들과 군실권자들로 회담 대표단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회담』</li> </ul> <p>※ 쌍방의 고위급 정치-군사실권자 간 회담</p>	

구분 제의별	내 용		비 고
	의 제	회 담 형 식	
	제고문제 및 중립국감시군 조직문제도 협의		
1987. 7.2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대규모적인 단계적 무력감축방안 문제 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미국 및 방청으로 「중감위」대표들이 참가하는 『다국적 군축협상』 개최</li> </ul>	○ 『3자회담』
1988. 7.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채택, “대한민국국회에 보내는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li> <li>○ 기타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에 유익한 남측이 제기하는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국회연석회의』 개최</li> <li>※ 불가침문제의 성과적 추진을 위해 「남북불가침공동선언」 초안 동봉</li> </ul>	○ 『남북한회담』 ※ 남의 「국회」, 북의 「최고인민회의」간 회담
1988. 11.7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 채택, 『포괄적 평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인 미군 무력철수 문제</li> <li>○ 남북무력감축에 대한 검증문제</li> <li>○ 「중감위」 권능 확대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미국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3자회담』 개최</li> <li>○ 『3자회담』에 방청으로 「중감위」대표 참가</li> </ul>	○ 『3자회담』

제 의 별	구 분	내 용		비 고
	의 제	회 담 형 식		
			<p>※ 『3자회담』에서의 합의에 기초하여 미북한간 「평화협정」체결, 남북간 「불가침선언」 채택</p>	
1990. 5.31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정무원 연합회의 채택, 『조선반도 평화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사훈련-군사 연습제한</li> <li>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li> <li>3. 남북간 우발적 충돌 확대방지 조치</li> <li>4. 단계적 무력감축</li> <li>5. 군사장비 질적갱신 중지</li> <li>6. 군축정형 상호통보-검증</li> <li>7. 한반도의 비핵지대화</li> <li>8. 일체 외국군대 철수</li> <li>9. 군축과 평화보장 조치</li> <li>10. 불가침선언채택</li> </ol>	<p>※ 구체적 제의없음.</p>	<p>※ 미국측에 「평화협정체결」 위한 『미-북한 회담』이나 『3자회담』 호응 촉구</p>	

### 3. 북한측 軍縮방안 內容對比 (표)

「한반도평화 군축방안」 (90. 5. 31)	「포괄적 평화방안」 (88. 11. 7)	「다국적 군축협상」 (87. 7. 23)	비 고 *우리측 관련제의
<p>〈남북신뢰조성〉</p> <p>1. 군사훈련-군사연습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군대와외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군사훈련 금지</li> <li>○ 사단급이상 규모의 군사훈련-군사연습 금지</li> <li>○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 금지</li> <li>○ 자기영내에서 외국 군대의 군사연습 불허</li> <li>○ 군사연습의 사전 상호통보</li> </ul> <p>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무장지대내 모든 군사인원-군사장비 철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군과의 합동 군사연습 중지</li> <li>- 연합부대이상 군사훈련 중지</li> </ul> </li> <li>○ 군사분계선일대 육-해-공에서의 일체 군사행동중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간 대화재개 및 협력확대를 통해 상호 신뢰구축 (88. 6. 10, 외무장관 유엔연설 「한반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안」)</li> <li>○ 대규모 훈련의 사전 통보 및 참관초청 (89. 2. 8,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예비회담 우리측 의제)</li> </ul>

「한반도평화 군축방안」 (90. 5. 31)	「포괄적 평화방안」 (88. 11. 7)	「다국적 군축협상」 (87. 7. 23)	비 고 *우리측 관련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무장지대내 모든 군사시설물 해체</li> <li>○ 비무장지대의 민간인 개방 및 평화적 목적 이용</li> </ul> <p><b>3. 남북간 우발적충돌 및 확대방지 안전조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 고위군사당국 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도발행위 일체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li> <li>○ 고위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가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완전 철거 (82. 2. 1, 「20개시범실천사업」)</li> <li>○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89. 2. 8, 남북 고위급회담 제1차예비회담 우리측 의제)</li> <li>○ 남북한 군비통제조치 협의, 쌍방 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82. 2. 1, 「20개시범실천사업」)</li> <li>○ 남북 고위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가설 (89. 2. 8, 남북 고위급회담 제1차예비회담 우리측 의제)</li> </ul>

「한반도평화 군축방안」 (90. 5. 31)	「포괄적 평화방안」 (88. 11. 7)	「다국적 군축협상」 (87. 7. 23)	비 고 *우리측 관련제의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무력감축〉</p> <p><b>4. 단계적 남북무력 감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축안 합의후 3~4년 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단계 : 30만명선</li> <li>-둘째단계 : 20만명선</li> <li>-세번째단계 종료시 각각 10만명아래 병력유지</li> </ul> </li> <li>○ 단계별 병력감축에 상응한 군사장비 축소·폐기</li> <li>○ 정규무력감축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민간무력해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무력의 단계적 감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력감축으로 무력군형 유지, 91년까지 3단계로 병력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89년말) : 40만명</li> <li>-2단계(90년말) : 25만명</li> <li>-3단계(92년부터) : 10만 이하로 유지</li> </ul> </li> <li>○ 병력감축에 상응한 군사장비의 단계적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무기-화학무기 등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 폐기</li> </ul> </li> <li>○ 무력감축개시후 6개월내 모든 민간군사조직 해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의 무력 88~91년까지 3단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2년이후 각각 10만이하 유지</li> </ul> </li> <li>○ 단계적 북남군축에 따라 남조선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군축 3단계 접근방안(88. 6. 10, 외무장관 유엔군축특별총회 연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호신뢰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대화, 상호협력</li> </ul> </li> <li>②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침협정</li> </ul> </li> <li>③ 상기 토대위에서 군축협상 개시</li> </ol> </li> </ul>

<p>「한반도평화 군축방안」 (90. 5. 31)</p>	<p>「포괄적 평화방안」 (88. 11. 7)</p>	<p>「다국적 군축협상」 (87. 7. 23)</p>	<p>비 고 *우리측 관련제의</p>
<p>5. 남북군사장비 질적갱신 중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군사기술 장비의 도입·무장장비개발 중지</li> <li>○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무장장비 불반입</li> </ul> <p>6. 남북군축 정형 상호통보, 검증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력감축 정형을 상호 상대측에 통지</li> <li>○ 상대측 지역에 대한 상호 현지시찰을 통해 군축합의 이행정형 검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미군무력철수후 남조선에 새로 무력불투입, 군사장비 불제공</li> <li>○ 미군무력 철수정형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통지</li> <li>○ 남북무력 축감정형 남북간 상호통지 및 내용공개</li> <li>○ 「중감위」권능을 확대, 미군무력 철수정형과 남북무력 감축정형 검증사업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병력 10만명으로 축소후 모든 미군무력·장비철수</li> <li>○ 자기측 무력축소정형 상대측에 통지, 세계에 공포</li> <li>○ 「중감위」는 북남무력축소·미군철수정형 검증사업 단계별 진행</li> </ul>	

「한반도평화 군축방안」 (90. 5. 31)	「포괄적 평화방안」 (88. 11. 7)	「다국적 군축협상」 (87. 7. 23)	비 고 *우리측 관련제의
<p>〈외국무력철수〉</p> <p>7. 한반도의 비핵지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배비 모든 핵 무기의 즉시철수 위해 공동노력</li> <li>○ 핵무기 생산-구입금지</li> <li>○ 핵무기적재 외국 비행기-함선의 조선경내 출입·통과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철수는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89년말) :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li> <li>-2단계(90년말) : 그 이남지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핵무기철수 및 군사기지 철폐</li> </ul>	
<p>8. 한반도에서의 일체 외국 군대철수 위해 공동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주둔 미군 및 그 장비들의 단계적 완전철수 조치</li> <li>○ 미군철수에 상응한 남조선설치 미군사기지의 단계적 철폐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년까지 3단계로 주한미군 병력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군철수 위한 3자 회담진행, 「대미평화협정」체결</li> </ul> </li> <li>○ 미군철수후 새 무력 및 군사장비 등 일체무기-전투기술기재의 대남조선 양도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미국의 핵무기철수 및 군사기지 철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의 무력통일 공세 포기 및 상호 신뢰구축 토대위에서 주한미군·남북 군축문제 논의 (90. 6. 7, 노태우대통령 「워싱턴」기자회견)</li> </ul>

「한반도평화 군축방안」 (90. 5. 31)	「포괄적 평화방안」 (88. 11. 7)	「다국적 군축협상」 (87. 7. 23)	비 고 *우리측 관련제의
<p>〈군축과 그 이후 평화보장〉</p> <p>9. 군축과 평화보장조치 강 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분계선 비무장 지대내 중립국감시군 배치가능</li> <li>○ 군비통제 및 군사분쟁 협의·해결 위해 쌍방 군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li> </ul>	<p>군사적 대결상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감위성원국 군사인원으로 중립국감시군 조직, 배치</li> </ul> </li> <li>○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권을 가진 고위급 정치-군사대표 참가</li> <li>- 동회담 테두리내에서 고위급정치회담과 군사회담 별도 개최 가능</li> </ul> </li> </ul> <p>*부총리급을 단장, 군총참모장급을 부단장으로 하는 7~9명의 대표단구성 (88.11.16, 정무원총리 이근모 대남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분계선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화, 중립국감시군 주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각료회의」내에 군사문제전담 상임위원회 설치 (89. 9. 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li> </ul>

「한반도평화 군축방안」 (90. 5. 31)	「포괄적 평화방안」 (88. 11. 7)	「다국적 군축협상」 (87. 7. 23)	비 고 *우리측 관련제의
<p>10. 협상을 통한 불가침 선언 채택 및 대폭적인 군축 합의</p> <p>*미국측에 미·북한회담이나 3자회담 호응 촉구</p>	<p>○ 「3자회담」에서 미군 무력철수·북남무력축감문제 합의에 기초하여</p> <p>-미·북한간 평화협정체결</p> <p>-남북간 불가침선언으로 확인·고착</p>	<p>○ 남-북한, 미국 및 「중감위」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 군축협상』 진행</p> <p>*88. 3, 「제네바」에서 개최할 것음제의</p>	<p>○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불가침 공동선언 (89. 10. 18, 노태우대통령 유엔총회연설)</p> <p>○ 「남북각료회의」내의 「군사분야상임위」에서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문제 협의 (89. 9. 11,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p>



## ＊ 부 록

- 1) 우리側 제의내용 全文 ..... 45
- 2) 北韓側 제의내용 全文 ..... 66
- 3) 南北軍縮관련 주요 報道內容 ..... 141



## 1) 우리側 제의내용 全文

○ 1982. 1. 22, 전대통령 국정연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천명시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제의

(전 략)

남북 쌍방간에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남북 쌍방은 그 동안의 민족자해적(民族自害的)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 속히 민족적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자애적(民族自愛的)인 정상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남북쌍방이 무엇보다도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위에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간 분쟁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넷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기술·환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常駐連絡代表部)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협의를 위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편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후 략)

○ 1982. 2. 1,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20개시범실천사업』 제의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있는 새해 국정연설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의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통일방안에서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일헌법을 기초할 것을 제창하면서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 작업을 순조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실현까지의 실천조치로서 7개항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당국에 제의하였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를 위한 남북쌍방의 각료급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당국에 제의하였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측의 주장까지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측이 호응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말로만 통일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각료급 예비회담을 개최하는데 북한당국이 하루 속히 동의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하여 우선 당장에라

도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示範事業)들을 실천에 옮길 것을 북한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1.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평양간 도로를 연결·개통한다.
2.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들간에 우편교류 및 상봉을 실현한다.
3.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지역을 관광휴양지로 설정하여 자유관광공동지역으로 개방한다.
4.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관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방문토록 한다.
5.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6. 남북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락방송 장치와 방송청취 통제장치를 제거하여 쌍방 정규방송을 자유로이 청취하도록 한다.
7.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올림픽대회에 북한측 선수단이 관문점을 통과하여 참가토록 한다.
8. 남북을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관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남북어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

10. 남북간의 관계개선 및 신뢰증진을 위하여 정치인·경제인·청년학생·근로자·문예인·체육인 등 각계 인사간의 상호 친선방문을 실시한다.
11. 남북사회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쌍방 기자들의 상대방 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12.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민족사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13. 남북간에 각 종목별 체육 친선교환경기를 개최하며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14. 쌍방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용생산품의 교역을 실시한다.
15. 민족경제의 번영을 위하여 남북간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을 실현한다.
16. 남북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업체간의 기술자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를 교환·개최한다.
17. 비무장지대내에 공동경기장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간의 친선경기에 이용한다.
18. 비무장지대내의 동식물의 자연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한다.
19.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을 완전철거한다.

20. 남북간에 군비통제 조치를 협의하며 쌍방 군사책임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용한다.

○ 1985. 8. 15, 전대통령 광복절40주년 경축사, “당국간 회담에서 「불가침문제」  
토의·해결”천명

(전 략)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관계의 확고한 기초는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교류와 협력의 원칙을 합의함으로써 튼튼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상호불가침」의 명제는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지상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그것을 추구해 왔으며, 우리의 결의와 실천노력은 오랜 세월에 걸친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그 전문(前文)에 명시하고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으로써 「불가침」을 국가최고의사(國家最高意思)로 민족과 세계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특히 지난 1982년에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 그 내용으로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사용 금지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과 상대방의 내부분쟁 불간섭을 포함한 7개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두 당국간에 「상호불가침」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한의 정상적인 관계를 여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토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입니다.

북한측은 근자에 남북간에 불가침을 선언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간은 물론, 어떤 당사자 사이에도 합의문서를 채택하는 것, 그 자체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난 40년간에 줄기차게 추구해온 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대남적화통일이라는 기본노선을 계속 고수할 경우, 그들이 말하는 「불가침선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위장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소 불가침조약을 비롯한 수많은 불가침조약이 그 일방의 파기로 휴지화(休紙化)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2년동안 북한측이 휴전협정을 얼마나 난폭하게 위반했으며, 그로 인해 북한측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불신이 얼마나 고조되었는가 하는 점이야말로 실천의지와 이행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북한측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바란다면, 이를 위한 어떤 협정이나 선언을 채택하는 것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노력과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불필요한 외교적인 경쟁과 대결을 지양하고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할 것을 밝히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상호불가침의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당사자간의 합의가 실효성 있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이  
해관계가 밀접한 주변국가들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통의 관심과  
이해를 개발시킴으로써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건  
설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북한측이 이러한 남북한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해서 성  
실한 자세를 보이고, 현재 진행중인 남북회담(南北會談)의 내실을 거두기 위  
한 우리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81년에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나오게 되기를 본인은 지금도 소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기를 기  
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광복 40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펼침으  
로써, 분단과 분열의 금세기를 청산하고 통일과 화합의 새 세기를 건설하는  
굳건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온겨레와 더불어 소망하는 바입니다.

(후 략)

○ 1987. 8. 3. 외무부 성명,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

(전 략)

한국정부는 민족화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온 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당사자간의 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는 것이 겨레의 염원에 부응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다.

평화와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며 그 주체는 당연히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한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 토대가 되는 신뢰구축에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85년 가을에는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까지 상호교환함으로써 흩어진 혈육간에 재회(再會)의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순간도 맛보았다.

더욱이 이 가운데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은 이제 쌍방이 조금만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구체적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측이 '86. 1.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모든 회담을 중단시킨 채, 3자군사당국자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또다시 미국을 포함한 3자군축협상을 제네바에서 갖자고 들고 나온 것은 남북한당사자 해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등 그동안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기존 대화를 재개하여 성실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수자원회담을 하루속히 열어 상호 신뢰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군축문제협의를 남북한 유엔가입 및 주변4강에 의한 교차승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현을 통한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이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군축문제는 한반도가 당면한 현실상황하에서 군사충돌 방지는 물론,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남북한불가침협정 체결과 유엔가입 및 교차승인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외무장관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이 회담에서는 기존대화의 재개·발전과 수자원문제의 협의·해결 등 신뢰구축문제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군축을 포함한 제반문제, 그리고 남북총리회담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는 문제 등 양측의 모든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동 회담은 남북한 외무장관이 금년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총회개최 직후부터 9월말 사이에 뉴욕에서 개최하든가 또는 같은 시기에 상호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간의 신뢰회복(信賴回復)과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충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 1988. 6. 10, 유엔 제3차군축특별총회 외무부장관 연설

(전 략)

우리는 1950년대초에 참혹한 전쟁을 겪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군사력의 사용을 특히 혐오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국전쟁의 황폐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군축(軍縮)을 진전시키고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 략)

한반도는 불행히도 이같이 군사대립이 첨예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에서의 군축문제가 군축의 다른 어떠한 측면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군축은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회복과 협력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155마일 군사분계선을 따라 약 150만의 중무장한 병력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한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간에는 국경을 넘은 방문이나 전화나 편지 같은 일체의 접촉도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에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은 여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같은 절차에는 대화와 모든 분야에서의 접촉의 시작 및 확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직접당사자인 남북한간의 조속한 대화재개(對話再

開)를 추구하여 온 것입니다.

(중 략)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대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리 목표가 단순해도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지름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목표가 높을수록 거기에 이르는 길은 더 멀다고 하겠습니다.

국제관계의 현실과 군축에 관계된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유일한 실제적 방안은 본인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적 접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체적 결과를 얻으려면 말뿐이고 추상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 한국대표단은 『한반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간의 조속한 대화재개와 후속 접촉 및 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서 남북한은 「불가침협정」의 체결에 합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러한 다음 남북한은 한반도 군축(軍縮)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인은 아국 국무총리의 6월 3일 남북한 책임있는 당

국간의 각료급회담 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후 략)

○ 1988. 10. 18, 노태우대통령 제43차유엔총회 연설, 「남북정상회담」 토의의제

(전 략)

의장,

나는 지난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분단 이래 남북한은 평화와 통일방안에 관하여 상이한 수많은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아무 전제조건 없이 직접 만나서 쌍방의 견해와 입장을 털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토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일성 주석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반응을 보인데 대하여 주목하면서, 나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30여년간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여 온 남북한간의 관계를 상호신뢰와 공존공영의 관계로 대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남북 최고책임자간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不可侵宣言)이 있기

전에라도 북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남북한은 오늘날과 같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 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이 회담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 략)

○ 1989. 2. 8,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예비회담 우리측 제시의제

(전 략)

넷째, 본회담의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여년 동안 한 겨레이면서도 전쟁과 대립과 갈등을 지속함으로써 건설과 번영에 쏟아야 할 민족역량을 낭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소모적 대결을 하루 빨리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세계에 과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면서 민족자존을 훼손시켜온 일부터 중지하여야 하며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북간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계개선(關係改善)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어느 일방만이 아니라 반드시 상호적인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간에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는 것은 고질적인 대결관계를 협력구조로 전환하는데에 빼놓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교류·협력의 실시와 함께 군사분야(軍事分野)에서도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이점은 귀측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민족의 장래문제인 통일실현문제와 불가침선언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 및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귀측에 전달한 총리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회담 의제(議題)를 다음과 같은 6개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상호 비방·중상중지 문제
  2. 상호존중 및 불간섭 문제
  3.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실시 문제
  4.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 남북 고위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가설
    -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 군인사의 상호 교류
    - 대규모 훈련의 사전통보 및 참관초청
  5.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6. 기타 쌍방이 제의하는 문제
- (후 략)

○ 1989. 9. 11, 노태우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시 남북연합체제  
구성제의

(전 략)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共存共榮)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聯合體制)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中間過程)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

(平和區域)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 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經濟圈)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休戰協定體制)를 평화체제(平和體制)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중 략)

새 공화국 출범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頂上)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憲章)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 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후 략)

## 2) 北韓側 제의내용 全文

○ 1980. 10. 10, 제6차당대회 김일성보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관련  
통일국가 『10대시정방침』제시

(전 략)

우리 당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이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 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불럭불가담국가로 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 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의 근본리익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 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여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 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원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인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량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합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관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량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개발하고 리용하며 상호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량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

시켜 왔습니다. 해방후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 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 길을 개발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가능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하며 조국에 돌아와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여야 통일국가안에서 전민족적 이익과 두 지역의 이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련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립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자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불력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 시정방침은 전체 조선인민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후 략)

○ 1984. 1. 10,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연합회의, “서울당국과  
미정부 및 의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

〈 서울당국에 보내는 편지 〉

우리는 1월 10일 현정세와 관련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이 편지를 서울당국에 보낸다.

조국이 분열된 때로부터 거의 40년이 되어가며 정전이 실현된 때로부터도 이미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한결같이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여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온 민족의 념원과 배치되게 긴장상태가 어느때보다도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가슴아프게도 민족내부의 불신과 반목은 갈수록 심화되고있으며 민족통일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지어 남쪽땅은 핵전초기지로까지 전변되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지난날과 같은 보통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으로 번져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우리 민족이 핵참화의 희생물이 되고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이 엄중한 사태발전을 누구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평화통일을 우리 세대에 실현하여야 하며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온 민족의 힘을 모아 난국타개의 길을 찾아야 한다.

현정세에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북과 남이 서로 대포를 걸어놓고 총칼을 맞대고있는 조건에서는 도저히 대화와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국과의 사이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일방으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회담할 것을 새로이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와 미국사이의 이 회담에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되어있는 다른 일방인 서울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3자회담을 진행하면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담보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쌍방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과 미국사이의 평화협정에는 주로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철수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에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

사를 하지 말며 군비를 축소할데 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그밖에 미국과 서울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토의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긴장완화의 담보가 주어지고 조국통일의 전제가 마련된 다음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열고 통일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는 이미 쌍방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하고 민족 앞에 그 리행을 약속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준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해결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당국을 포함하여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대회와 같은 정치협상회의가 소집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북과 남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지역이 각각 자치제를 실시하는 중립적인 련방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서울당국에 통일국가창설과 관련한 다른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 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며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전환적인 발기로 된다.

3자회담은 판문점이나 그밖의 편리한 제3국에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긴장완화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서장으로 될 3자회담이 하루빨리 소집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서울당국이 우리의 제의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일 것을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1984년 1월 10

평 양

〈 미합중국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토의결정하고 이 편지를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 상, 하 양원에 보낸다.

오늘 조선반도는 평화나 전쟁이나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지도 벌써 서른해가 지났으나 평화의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사태는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첨예한 국면으로 더욱더 다가가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되어있는 가운데 남쪽에서는 무력증강이 계속되고 대규모 전쟁연습이 련이어 벌어지고 있다.

현정세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소한 사건으로 해서도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터질 수 있을 만큼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조성된 정세는 세계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다음 일관하게 미국과의 적대적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도를 여러모로 탐구하여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미 197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직접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당신들은 우리가 남침을 하려 한다고하면서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으며 있지도 않는 남침을 막는다는 구실을 가지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동족상쟁을 하려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고있다.

날로 격화되고있는 쌍방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는 호상 불신과 반목만을 조성하고 전쟁위험을 더욱더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결코 조선경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불피코 핵전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뿐아니라 미국인민들도 편안하지 못할 것이며 전세계가 다 핵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문제는 핵전쟁의 길로 계속 달음박질해 나가는가 아니면 평화의 길로 돌아서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지금과 같이 첨예한 대결상태를 지속시켜서는 당신들이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가 다같이 격폐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조선반도에 엄중하게 조성된 전쟁위험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길을 공동으로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인정한다.

출로는 오직 대결이 아니라 당사자들사이의 대화에 있다고 우리는 깊이 믿고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오늘 조선에서의 긴장상태격화에 책임이 있는 다른 일방인 남조선당국자들과 함께 우리와 접촉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1984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자들을 참가시키는 3자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3자회담을 진행할 장소로서는 판문점도 좋고 또 호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임의의 다른 곳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상태가 어느때보다도 격화되고 핵전쟁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자회담에서는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일방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적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우리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와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고 본다.

평화협정에는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선포하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수 있을 것이며 불가침선언에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며 쌍방의 군대를 축감할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불가침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상태 완화와 조선통일의 전제조건이 마련된 다음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열고 7·4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민족대회를 열고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북과 남의 현존사회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지역자치제에 기초한 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과 북과 남사이의 통일대화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될 때에 조선반도에서 항구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담보들이 믿음직하게 마련될 것이다.

통일된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고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정치군사적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완전히 자주적인 엄정중립국가로 될 것이다.

통일된 조선은 나라가 통일되기전에 남조선에 투자된 외국의 자본을 다치지 않고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할 것이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미국은 자기의 체면과 리해관계를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영예롭게 손을 뺄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미국인민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될 것이다.

미국과 우리는 한번 전쟁을 하였다. 우리 두 나라가 한번 싸웠다고 하여 영원히 적대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다시 전쟁을 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인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이번 제의는 변화된 현정세에서 가장 시기 적절하고 합당한 것이다.

력사적배경으로 보나 현실적절박성으로 보나 조선문제를 언제까지나 미해결 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새로운 평화적 발기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

1984년 1월 10일

평 양

○ 1985. 4. 9, 최고인민회의 제7기4차회의, 「남북국회회담」관련 의제

(보도, 4.9, 12:00, 중방)

〈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

올해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8.15광복 40돛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40년전 력사의 그날에 우리의 삼천리강산은 북과 남이 따로없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으로 끓어번졌습니다.

그러나 온 민족이 목메여 웨치던 해방의 환호성은 순간으로 사라지고 그날과 더불어 시작된 민족분렬의 가슴아픈 력사는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해방후 40년은 분렬의 40년이였고 대결의 40년이였으며 재난의 40년이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념원도 아니고 의지도 아닌 이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동포형제들이 통일을 절규하고 통일에 한생을 바치며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까.

그런데도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높아가고 있는 것은 분렬의 장벽이며 이 분렬의 고통우에 더해가고 있는 것은 민족내부의 대결과 전쟁위험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지난해초에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전환적인 조치로서 3자회담을 가질것을 남조선과 미국에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3자회담은 실현되지 못하고 정세는 도리어 긴장격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북과 남사이에 처음으로 구호물자를 주고받은 뜻깊은 사변을 계기로 모처럼 재개되었던 적십자회담과 새 출발을 보였던 경제회담마저 중단사태에 놓여있으며 한때 조성되었던 완화의 기운마저 다시 흐려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대결, 완화와 긴장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이 현실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대결과 전쟁은 북에도 남에도 다 리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력과 재부를 헛되이 소모하고 결국에는 민족의 자멸을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민족끼리 대결하여 긴장을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여 완화와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오직 완화와 평화만이 북과 남이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의 존망과 관련된 이 길을 열어나가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정치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완화와 평화로의 길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때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중대한 사명감으로부터 우리는 나라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가시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사이의 회담을 가질것을 본 최고인민회의의 이름으로 귀 국회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우리의 이 제의는 3자회담이 마련되기전이라도 긴장완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민족끼리 마주앉아 가능한 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립장에서 나온것입니다.

우리가 제기한 당국사이의 부총리회담도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으로서는 긴장완화와 같은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조건에서 쌍방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국회회담을 가지는데 있습니다.

특히 북과 남의 각 정당들이 망라되어있는 우리의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의사이의 회담은 온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나라의 평화문제를 협의해결하는데서 북과 남의 광범한 의사를 모을 수 있는 가장 적중한 대화방식으로 됩니다.

우리는 쌍방 국회회담에서 무엇보다도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회담을 통하여 우선 이런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쌍방당국이 이를 구체화하여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한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회담에서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남조선측의 어떠한 제안도 함께 토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문제를 비롯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문제들이 실천적으로 해결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동족사이의 반목과 대결이 해소되고 신뢰와 단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될 것이며 북남관계 전반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회담의 개최는 의심할바 없이 북과 남사이의 다각적인 대화의 길을 열어 놓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그의 성과적인 진전을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쌍방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서로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겨레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나가게 된다면 북남사이에는 고위급정치 회담을 마련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쌍방 국회회담은 앞으로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에도 고무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북남사이의 합작과 교류에도 밝은 전망을 펼쳐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40년동안 쌓여온 불신과 대결의 력사와 결별하고 민족내부의 화목과 평화를 가져올 북남 국회회담이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쌍방은 이미 올해 신년사와 국정연설에서 다같이 북남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당국사이의 최고위급회담에 대한 강한 희망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를 마련할 수 있는 공동의 기초가 있다는것을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국회회담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쌍방 국회련석회의를 하든지 또는 국회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표회담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련석회의는 서로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우리 최고인민회의에 귀 국회 의원들이 련석하고 귀국회 본회의에 역시 우리 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이 련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대표회담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단구성을 각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정당 출신 의원들을 망라하여 적당한 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회담과 관련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쌍방의장들이 임명하는 실무

대표들로서 예비접촉을 5월초에 판문점에서 가지는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평화를 가져 오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야 할 절박한 현실앞에서 말로만 화해와 평화를 외울 것이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화해와 평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평화도 통일도 다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같은 혈육인 우리에게서 리념도 제도도 소중하지만 먼저 민족이 귀중하며 우리는 민족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족적공통성을 최우위에 놓고 서로 합심하면 능히 같은 민족으로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갈수 있습니다.

북과 남의 량심있는 정치인들은 다같이 나라와 민족 앞에 지닌 자신의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목과 불신과 대결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화해와 신뢰와 평화를 위한 애국의 길에 혼연히 나서야 합니다.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롭고 통일된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온 겨레가 함께 수행하여야 할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어떻게 하나 힘을 합쳐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전쟁을 막아야 하며 평화적경제건설을 다그쳐 다같이 잘살아야 하며 분단의 계선을 넘어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며 민족적화목과 혈육의 뜨거운 정을 나누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그날과 잇닿아 있는 우리의 애국적인 발기에 적극 호응하여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

죽적 대행진에 발맞추어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7.4의 그날에 밝게 비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공동의 이정표로 세워져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 기어오른 민족이 함께 맞이하고 함께 누릴 평화와 통일의 새 장을 마련함으로써 광복 40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해로 장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념원으로부터 대결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통일독립된 조국의 래일을 기약하여주는 우리의 새로운 평화제의를 새로 개원되는 귀국회가 신중의 토의하고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1985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4차회의

평 양

○ 1986. 6. 17,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대남편지(6.9자), 「3군사당국자회담」제의

(로동신문, '86. 6.18)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리기백귀하 〉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는 우리 군사당국자들로 하여금 민족과 세계 앞에서 책임적인 완화조치를 시급히 취해나갈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도 아는바와 같이 40여년동안이나 분렬의 비운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절실한 과업은 없습니다.

겨레의 이 간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지난해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진행되었으며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민족분단 이래 처음으로 적십자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이 교환되어 겨레의 아픈 마음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올해에 들어와 북남관계는 다시 대화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긴장상태는 일층 격화되어 북남대화들이 일시에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세는 사실상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다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온민족을 핵참화에로 몰아넣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에도 남에도 다같이 리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나는 귀하도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가 못하는가,

중단된 대화를 다시 잇는가 잇지 못하는가 하는 중대한 시기에 온 겨레와 인류는 우리들, 책임있는 군사당국자들을 지켜보고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평화발기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려는 진지한 념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남조선주둔 연합국군총사령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는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긴박하고도 절실한 문제를 협의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직접적요인으로 되고있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에서는 이밖에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그 밖의 호상 편리하다고 보는 다른 곳을 정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담개최날자는 7월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나는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비접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각기 임명하는 3명정도의 실무대표와 적당한 수의 수원들로 오는 6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가질 것을 아울러 제의합니다.

군사당국자회담이 열리고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면 조선에서 완화와 평화의 새 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며 북남대화에서도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며 나라의 평화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발기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오 진 우

1986년 6월 9일

〈 연합국군총사령관 「윌리엄 제이 립씨」 귀하 〉

나는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보장하며 대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념원으로부터 귀하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귀하도 알고있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나라의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대화가 진행되고 부분적인 래왕이 실현되어 세상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완화와 평화에로 나아가던 이러한 움직임은 순간으로 사라지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나날이 첨예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함한 전쟁수단들이 대대적으로 증강되고 병력의 이동과 전진배치가 계속되며 대소규모의 군사연습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쌍방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는 조선전쟁이후 가장 엄중한 국면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조선반도에는 우리들 적대쌍방사이의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전례없이 격화되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북남대화들이 중단상태에 빠져있으며 새 전쟁의 위험이 박두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민족과 함께 세계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평화 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군사적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시기에 조선에서의 정세발전을 완화와 평화의 방향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줌이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참화를 가져다주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우리 조선인민에게 리롭지 못할뿐아니라 미국에도 좋을것이 없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이번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과 남조선주둔 연합국군총사령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데 대해 내놓은 발기가 매우 시기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완화에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가질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는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긴박하고도 절실한 문제를 협의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직접적요인으로 되고 있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조선정전 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에서는 이밖에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는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그밖의 호상 편리하다고 보는 다른곳을 정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담개최날자는 7월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나는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비접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각기 임명하는 3명정도의 실무대표와 적당한 수의 수원으로 오는 6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가질것을 아울러 제의합니다.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있는 군사실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간다면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완화와 평화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북남대화들을 잘할 수 있는 훌륭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조선과 아세아,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우리의 새로운 평화발기에 귀하가 깊은 주의를 돌리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줄것을 희망합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제1대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오 진 우

1986년 6월 9일

○ 1986. 6.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조선반도 비핵지대·평화지대』

창설협상 제의

(로동신문, '86. 6.24)

평화는 인류의 가장 귀중한 념원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오늘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들은 세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고 언제나 평화롭게 살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세계인민들은 국제평화의 해인 올해가 지구상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반전 비핵 평화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절절한 념원과는 다르게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의 시험, 생산축적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

핵군비증강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위험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 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 곳은 조선반도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의 위험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평화위업앞에 지닌 자기의 중대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화국정부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들을 철수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킬데 대한 정당한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측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것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평화적제안들을 수많이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정부의 합리적인 제안들은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오늘 조선반도는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되고 있다.

남조선에는 핵폭탄과 핵포탄, 중성자무기를 비롯한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반입, 배치되었으며 그의 총폭발력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0배에 이르고 있다.

남조선은 극동지역 전체에 전개된 미국핵무기의 절반이상이 집중된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핵무기배치밀도에서 나토보다 4배나 더 높은 세계 제1의 핵기지로 되었다.

미국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핵작전계획을 짜놓고 핵시험전쟁을 가상한 전쟁연습을 계속 벌려놓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핵전쟁으로 되고 쉽게 조선경외로 번져가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남조선에서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고 조선인민뿐아니라 우리주변나라 인민들이 핵위협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뿐 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조선반도를 핵무기, 핵기지가 없는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올해 국제평화의 해에 즈음하여 고조되고 있는 세계인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자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천명한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정부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남조선에 대한 새로운 핵무기반입을 중지하며 이미 반입한 모든 무기들을 단계별로 축감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철수하며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사용과 관련한 모든 작전계획들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제의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협상이 필요하다면 그 협상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에 어느때나 응할 것이다.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제안은 국제평화의 해인 올해에 이 지역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

결해나가는 견지에서 보나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보나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안이다.

조선에 비핵지대, 평화지대가 창설되면 이 지역에서 인류에게 무서운 핵참화를 들뜨우게 될 핵전쟁의 위험은 사라질 것이며 인류가 마음놓고 살수 있는 항구한 평화가 담보될 것이다.

미국이 진심으로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공화국정부의 평화적제외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조선문제로 하여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전세계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며 조선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력불가담나라들, 세계 모든 진보적인 나라 정부들과 정당, 사회단체들, 국제기구들과 국제민주단체들, 반제평화애호단체들과 투쟁조직들, 각국의 평화애호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변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해주며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핵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1986년 6월 23일 평 양

○ 1987. 1. 11, 정무원총리 ·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대남편지, 「남북고위급

정치 · 군사회담」제의

(로동신문, '87. 1.12)

우리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와 인민무력부장이 남조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1987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남측에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상대측에서는 예정된 날자에 편지를 받아가는 것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측은 편지에서 지적된 문제해결의 절박성으로부터 부득이 편지를 남조선측에 방송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와 인민무력부장이 남조선측에 방송으로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다.

#### 대 한 민 국

〈 국무총리 로 신 영 귀하, 국방부장관 리 기 백 귀하 〉

귀측에서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중대한 제안을 새롭게 천명하시였습니다.

이 획기적인 제안은 우리나라에서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정치적 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구국대책으로 됩니다.

현시기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온 겨레의 사활적리익과 관련한 완화와 평화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북과 남의 정치, 군사 실권자들의 피

할수 없는 공동의 의무라고 우리는 간주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위임에 의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것을 귀측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개최시일은 오는 1월 27일 오전 10시로 하며 회담장소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과 귀측 지역의 평화의 집으로 하되 첫번째 회담은 통일각에서 가질것을 희망합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대표단은 쌍방이 제기하는 정치, 군사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고 군총참모장급을 부단장으로 하는 7~9명 정도의 당국자들과 군실권자들로 구성하며 여기에 5명 정도의 수원들을 동행시키는 것이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과 관련한 예비접촉은 문제토의의 성격으로 보나 그 해결의 절박성으로 보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만일 귀측에서 요구한다면 쌍방에서 각각 2명 정도의 실무자들이 만나 대표단의 판문점래왕절차를 협의하고 회담장소를 확인하는 정도의 극히 실무적인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기초우에서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적뉴대를 도모하는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당면한 조치로서는 무력을 축소하고 군비 경쟁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큰 규모의 군사 연습을 그만두는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높일데 대한 문제와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에서 쌍방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기구로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체스꼬슬로벤스꼬, 뿔스까, 스위스, 스웨리에의 군사인원들로 중립국감시군을 조직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에서는 이밖에도 정치, 군사 정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귀측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열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면 그것은 북과 남의 정치적대결과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완화와 평화의 새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면 좋은 분위기속에서 여러 분야의 북남대화들도 재개되어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어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들이 풀릴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리 근 모

인 민 무 력 부 장 오 진 우

1987년 1월 10일

○ 1987. 7.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남-북한 · 미국참가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로동신문, '87. 7. 24)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현 시대가 인류앞에 제기하고 있는 가장 엄숙한 과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평화위협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불안정한 정전을 공고한 평화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조선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이후 여러차례 매우 위험한 고비를 겪으면서도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평화를 자기의 본성적요구로 삼고 있는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인내성있는 평화애호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되어있다.

이러한 대치상태는 날을 따라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정세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라도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한 단계에 놓여있으며 이것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항시적인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현 군사적대치상태를 끝없이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북과 남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데 대한 문제, 3자회담을 진행하여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긴장완화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북과 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긴장완화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획기적인 발기를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전후 미국과 남조선측이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었던 1956년에 8만명의 병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였으며 1986년에는 15만명의 병력을 평화적건설에 동원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한 합리적인 긴장완화방안들과 실천적조치들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과 발기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길으로는 완화에 대하여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나가고 있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전략적지위를 강조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무력을 급격히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개한 1,000여개의 핵폭탄과 핵탄두를 발사운반할 수 있는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1988년 올림픽경기의 <안전개최>를 구실로 미국태평양함대무력을 남조선연안해역에 배치하고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데 대하여 특별히 주목하게 된다.

조선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는 오직 완전한 군축을 실현함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다.

남조선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주정권이 선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유지하면 평화와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통일된 강토에서 영원히 전쟁의 불안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망에 맞게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단계적무력축감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조선에서 북과 남의 무력균형은 서로 무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서로 무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북과 남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을 축소하며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북과 남의 병력이 먼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조선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

셋째, 조선의 북과 남은 각기 자기측의 무력축소정형을 상대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하며 미국은 자기 군대의 철수정형을 우리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한다.

현재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조선의 북과 남에서의 무력축소정형과 미군철수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북과 남의 병력이 축소되는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있을수 있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방지하며 계속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감시군을 주둔시킨다.

다섯째,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축소와 철수 및 그에 대한 검증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와 중립국 감시군 조직 및 그 배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선의 북과 남, 미국사이의 회담에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뿔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인 군축협상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진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1987년말까지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일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이 대폭 축소되고 외국군사기지가 철폐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가 평화복도로 전환되면 조선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 비핵평화지대, 완충지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군축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요인이 영원히 제거되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밝은 전망이 열려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군축제안은 완화와 군축으로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것

으로서 그의 실현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성의있는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완화를 진정으로 이룩하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의심부터 앞세우지 말고 대세의 흐름에 맞게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도 우리의 평화적발기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고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세계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지지성원밑에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군축을 실현하여 영원한 평화가 깃들게 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1987년 7월 23일      평      양

○ 1988. 7. 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채택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남국국회연석회의」 제의

(로동신문, '88. 7. 24)

북과 남은 머지 않아 조선정전이 실현된지 서른다섯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전이 되던 그때 우리 겨레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이처럼 오랜 세월 지속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결과 긴장이 끝없이 격화되어온 지난 35년동안 어느 한시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보지 못하였으며 어느 한때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사이 온 강토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을 일촉즉발의  
긴박한 사태가 조성된 때도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온 민족을 멸살시킬 핵전쟁  
위험이 밀려온때도 한두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대결과 분쟁이 가시지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져도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한번 대결이 멎은적이 없고 긴장이 해소된 적이 없으며  
화합과 단합이 실현된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전쟁때이상의 재부를 서로 대결에 소모하며 너무도 오랜 세  
월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불안한 정세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대결을 가시기 위한 발기들이 없었던것도 아니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적었던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완화와 평화우에 오늘 더해가고 있는 것은 대결과 긴장  
이며 쌓이는 것은 전쟁, 핵전쟁 위험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동서해에 떠도는 항공모함전단이 무엇에 소용되고 곳

곳에 산적되어있는 핵무기가 무엇에 필요하며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연습이 무엇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결과 전쟁은 남에도 북에도 리로울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올림픽경기에도 좋을것이 없고 세계청년학생축전에도 해가 될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전쟁을 막아야 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을 전쟁의 위험에서 오늘 벗어나지 않으면 핵참화가 휩쓸 래일에는 후회도 할 수 없고 평화도 볼 수 없으며 통일이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류도 좋고 교역도 필요하지만 보다 긴급한 것은 긴장의 완화 이고 대결의 해소이며 전쟁의 방지입니다.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칼을 버리며 대포질을 하는 오늘의 대결상태를 그대로 두고 말로나 비방중상을 그만둔다고 하여 불신이 가셔질것도 없고 신뢰가 회복될 것도 없습니다.

더우기 속에 칼을 품고 원썩처럼 지내고 있는 북남사이의 근본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서로 교류와 교역도 할수 없고 화합과 단합도 이룰수 없으며 협력관계도 가질수 없습니다.

온 겨레는 한시바삐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지내며 통일된 조국에서 살것을 바라는데 완화와 화해의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교류나 교역으로 한정없이 세월이나 끌자고 해서야 언제 겨레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통일의 기쁨을 가져다주겠습니까.

칼을 버리고 대포질을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교류나 교역을 하

여도 북과 남은 여전히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남처럼 살게 될뿐 언제 가도 화목한 민족공동체로 될 수 없습니다.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야말로 북과 남이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야말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민족앞에 지닌 책임을 통감하고 한 자리에 마주앉아 완화와 평화를 위한 방도를 함께 모색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미 내놓은 북남련석회의제안에는 온 민족의 의사를 모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절절한 념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북남련석회의가 완화와 평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협상마당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비추어 이 회합이 소집되기전이라도 북남사이에 불가침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회담으로서 이미 우리측에서 제의한바 있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토의할것을 예견한 북남국회회담이 가장 적절한 회담으로 된다고 봅니다.

북남국회회담에 대해 말한다면 북과 남은 1985년 6월에 국회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두차례의 예비접촉을 가지였으나 중도에 예비접촉자체가 결렬되어 본회담까지 들어가지 못한바 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무엇보다도 이 회담을 열것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회담의 개최야말로 현시기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하여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민족앞에 지닌 사명을 다하기 위한 중대사입니다.

더우기 귀측에서 올해에 국회가 새로 선거되고 그 구성이 달라졌으며 우리도 그 사이에 최고인민회의가 새로 구성된 사실은 쌍방이 국회회담을 가질수 있는 새로운 조건과 가능성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북남국회회담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새 국회들이 새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예비접촉을 거침이 없이 직접 우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귀 국회의원들의 련석회의를 가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련석회의는 긴장완화문제를 토의하는 우리 최고인민회의에 귀측 국회의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참가하고 역시 같은 문제를 토의하는 귀 국회에 우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참가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것입니다.

국회련석회의를 가지는데는 어려울것도 없고 복잡할것도 없습니다.

국회련석회의에서는 북과 남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토의하며 그리고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유익한것이 라면 귀측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불가침문제의 토의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의 기초로 될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이 편지에 동봉하여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국회련석회의에서 토의하려는 문제의 중대성으로 보아 이 회의에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도 참가하면 더 좋을것이라고 봅니다.

국회련석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하되 그 운영방식은 쌍방 국회의장들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회의를 평양에서 할 때는 우리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이

사회를 맡고 서울에서 할 때는 귀 국회의장이 사회를 맡는 식으로 하면 될것  
입니다.

회의에서의 토론은 상정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진행하  
며 의결방법은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수가 더 많더라도 공명정대성을 기하  
기 위해 우리측 대의원수를 귀측 의원수에 대등하게 하고 투표와 거수의 방법  
을 배합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면 좋을것입니다.

쌍방 국회의원들이 호상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국회의원의 일반적  
특전을 부여받도록 하는 문제도 고려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제1차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오는 8월안으  
로 평양에서 가질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북남국회련석회의가 소집되어 불가침문제를 비롯한 완화와 평화를 위해 나  
서는 제반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국회련석회의의 소집은 의심할바없이 북과 남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인  
민들사이의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의 길을 열어놓게 될것이며 중단된 적십자회  
담과 경제회담을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것입니다.

북과 남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오고가면서 련석회의를 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교류도 저절로 실현되고 각계 인사들의 래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며 북과  
남의 협력과 교역의 길도 트이게 될것입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수백  
수천명씩 한자리에 모여 회합을 가지며 복잡한 국제문제들을 풀고있는데 하물  
며 하나의 피줄을 잇고 같은 말을 하는 동포들끼리 아무리 많이 모인들 민족

내부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리유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주앉아야 합니다. 마주앉으면 긴장도 해소할 수 있고 신뢰와 화해도 도모할수 있으며 평화통일의 넓은 문도 열수 있습니다.

남조선국회의원들은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완화와 평화와 통일을 기약하여주는 북남국회련석회의마당에 혼연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 국회가 애국충정에 넘치고 통일구국의 의지가 담겨져있는 우리의 북남국회련석회의제의를 신중히 대하고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 < 북남불가침 공동선언(초안) >

북남국회련석회의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당국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북과 남사이에 있을수 있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3.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이나 무장간섭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며 그것을 협조하지 않는다.

4.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의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5. 북과 남은 서로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하며 그에 병행하여 조선반도의 지역안에 주둔해있는 외국군대와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6. 북과 남은 현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하고 완충지대안에서 무장충돌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그 담보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중립국감시군을 두도록 한다.
7. 북남불가침선언은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 협정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다.

북남국회련석회의는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할것을 쌍방당국에 위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는 북남국회련석회의에서 발표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북 남 국 회 련 석 회 의  
1988년      월      일

○ 1988. 11. 7,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정무원 연합회의,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 제의

(로동신문, '88. 11.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가 11월 7일 평양에서 있었다.

련합회의에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 정무원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의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 보장대책에 대하여>를 상정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련합회의는 우선 안팎의 정세를 분석평가하고 나라의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새롭게 조성되고있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확인하였다.

련합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통일은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실현되지 못하고 여전히 민족의 숙원으로만 남아있다. 그동안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기울여온 우리 인민의 노력과 투쟁, 그에 바쳐진 정력과 희생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통일을 위한 민족의 념원과 지향은 항상 첨예한 정세의 도전을 받아왔다. 나라가 분열된후 북과 남은 끊임없는 대결과 전쟁의 위험속에서 4반세기동안이나 대화없는 엄혹한 단절의 시기를 보냈으며 70년대이후에 마련된 대화들은 극도에 이른 불신과 무력충돌의 위험속에서 거듭 성과없이 결렬되고말았다.

평화가 없이는 대화를 성공시켜나갈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조국의 통일이 긴박하면 할수록 평화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어야 우리 민족을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위업에도 이바지할수 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평화문제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비추어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부터 일관하게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재발을 막으며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합리적인 평화제안들을 내놓았으며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예한 군사정세를 완화할 긴급대책을 취할것을 거듭 제의하였다. 우리는 성실한 평화노력의 표시로 여러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병력을 축감하고 대규모군사훈련을 중지하는것과 같은 실제적인 조치도 취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평화애호적인 립장과 노력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현실은 우리의 일관한 평화애호적인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 있다.

오늘 안팎의 정세는 복잡한 흐름속에서도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 위업을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각계각층 인민들의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 있으며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광범한 계층이 남조선에서 미군과 함께 핵무기를 철거할것을 주장해나서고 있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불가침선언을 채택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하여 말도 할수 없었던 남조선에서 이제 그것은 누구도 막을수 없고 되돌려세울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다.

국제적 범위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 인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완화의 국면이 열리고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완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거세찬 조류앞에서 오늘날에 와서는 남조선의 집권자들도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외면할수 없게 되였으며 종전않건 그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련합회의는 이러한 환경속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자가 유엔총회에서 한 발언에서 군사문제를 협의할 용의를 표시한 사실에 류의하였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은 평화에 대하여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평화제안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평화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것도 반대하여왔다. 그들은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북남대화에서 군사문제를 협의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와 마주앉아 군축과 불가침선언에 대하여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것은 그 진의는 어떻든 주목할만한 긍정적인 사태발전이다. 남조선당국자의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비록 때늦은 감이 있고 아직은 막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우리의 인내성있는 평화제안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측이 조성된 정세와 민족의 절박한 념원에 맞게 우리와의 평화협상에 응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때나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진실로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립장에서 협상마당에 립한다면 의심할바없이 평화의 길은 열리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는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선택여하에 달려있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은 수십년동안 민족의 머리우에 무겁게 드리워져있는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위한 전환적인 국면을 과감하게 타개해나가야 할 때이다.

평화에로의 귀중한 새 출발이 목전에 이른 오늘 북과 남은 응당 공동의 평화강령으로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근본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함께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보조를 같이해나가야 한다.

련합회의는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우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의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평화보장 4원칙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첫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평화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분렬된 우리 나라에서 평화는 결코 그자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두개 조선>으로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평화>로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 민족에게는 평화도 귀중하지만 통일은 보다더 귀중하다. 이른바 <평화 정책>이라는 간판밑에 평화를 분렬주의적인 <두개 조선>조작에 리용하려는 시도는 배격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을 위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며 따라서 평화는 반드시 통일지향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외국무력의 존재는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에 외국군대가 틀고앉아있는 한 평화는 실현될수 없으며 외국무력을 그대로 두고 평화에 대하여 논하는것은 공담에 불과하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여서만 공고히 담보될수 있다.

셋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북과 남의 군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북과 남이 보유하고있는 방대한 무력은 쌍방에 다같이 무거운 부담으로 될뿐아니라 무력충돌을 유발할수 있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경쟁적인 무력증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는 절대로 전쟁을 막을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자면 쌍방이 힘의 립장에 서서 군비경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무력을 최소한도로 줄이여 상대방에 대한 공격능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남조선에서 외국무력을 철수시키는것과 함께 북과 남사이의 균형있는 군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항구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넷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긴장격화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긴장격화의 요인은 조선반도 밖에 있는것이 아니라 안에 있으며 그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있는 미국과 조선의 북과 남이다.

조선반도안에 있는 전쟁의 화근을 외면하고 조선문제토의에 이리저리한 나라들을 끌어들이어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는 평화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통일지향, 외군철수, 북남군축, 당사자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보장 4원칙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원칙이며 평화문제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공동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이 이 평화보장원칙을 함께 확인하고 그를 성실히 리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평화는 가장 빠른 시일안에 가장 공고하게 실현될수 있을것이다.

련합회의는 평화보장 4원칙에 기초하여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북과 남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련합회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존재가 가장 큰 장애로 되며 이 문제의 해결은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련합회의는 완화와 평화에로 나가는 현 추세는 남조선에서 미군무력의 철수를 더는 미룰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상정하고있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현존무력의 단계적인 축감과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

화를 예견하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기하였다.

〈 1.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 〉

1) 미군무력의 단계적인 철수

①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핵무기들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먼저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한다.

②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한다.

미군병력의 철수는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와 함께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의 부산, 진해 계선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의 전체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 공군의 전체를 철수한다.

③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미국은 남조선에서 철수하게 될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는다.

## 2)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① 북과 남은 서로 병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병력의 축감은 군사분계선 전연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특수부대, 특전대병력부터 먼저 하는 원칙에서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북과 남의 병력수는 각각 1989년말까지 40만명, 1990년말까지 25만명 수준으로 축감하여 1992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한다.

② 북과 남은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를 단계별로 축감한다.

군사장비의 축감은 단계별 병력축감에 맞게 하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히 폐기한다.

무력의 축감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의 반입을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무력축감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안에 모든 민간군사조직을 해체한다.

## 3)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① 미군무력의 철수정형에 대하여 미국은 북측에 통지하고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에 대하여 북과 남은 상대측에 각각 통지하며 호상 통지한 내용을 공개한다.

②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여 미군무력의 철수정형과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 4) 북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한다.

3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조미, 북남사이의 쌍무회담도 할 수 있다.

② 3자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검증문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뿔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을 방청으로 참가시킨다.

③ 3자회담에서는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합의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조미사이의 평화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킨다.

## < 2.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

### 1)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① 북과 남은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뼈라살포와 군사분계선일대의 전연방송을 중지한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를 중지한다.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법규들을 철폐한다.

③ 북과 남은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정당, 단체와 개별인사들의 쌍무적, 다무적 접촉과 자유로운 인

사태왕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리용하며 상품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공동협력을 실현한다.

## 2)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① 북과 남은 쌍방 무력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들로 조직된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한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전후방에서 연합부대이상의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규모여하를 막론하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일체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④ 북과 남은 우발적인 충돌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쌍방 고위군사 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 3) 북남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는 실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쌍방의 고위급 정치군사대표가 참가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안에서 고위급 정치회담과 군사회담을 따로 할수 있다.

련합회의는 이상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북남사이에 조성된 침예한 대결과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가장 합리적인 평화강령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이 제거되고 핵전쟁의 위험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전쟁의 온상으로 간주되어온 조선반도는 안전한 비핵평화지대로 전환될것이다. 수십년동안 지속된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 반목과 대결의 력사는 끝장나고 우리 나라에는 화해와 신뢰와 단합의 새로운 력사의 장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이 모든것이 온 민족에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새 희망을 안겨주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는 완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추세와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민족의 간절한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여기에는 조선반도정세의 완화를 바란다고 하는 미국과 그리고 군축을 비롯한 군사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남조선당국자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

세상사람들은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태도에서 그들이 한 말의 진실성여부를 가려보게 될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의 완화와 조미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문화분야의 부분적인 교류와 외교관접촉, 식료 및 의약품 판매 등 극히 제한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선심이나 쓰는것처럼 할것이 아니라 조선문

제해결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우리 나라의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도 유엔무대에 가서 군축을 하고 불가침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한 말이 진실이라면 구태의연하게 미국에 <안보협력>을 요청하거나 그 무슨 <국제적 환경조성>에 낚을 돌릴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나라 땅에서 전쟁의 화근을 제거할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련합회의는 우리의 획기적이며 현실적인 평화방안이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와 미국, 남조선사이의 3자회담과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이 마련되고 그것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면 북남쌍방은 좋은 분위기속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게 될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 위업을 성취하는 길에서 북남최고위급 회담은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

북남최고위급 회담에서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와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문제와 같은 기본문제들이 협의될것이며 그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련합회의는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마련하는데서 쌍방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이 회담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련합회의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이 또한 국회회담을 진척시키고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포함한 여러 갈래의 대화를 계속하는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외세가 없고 전쟁위험이 없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것은 근 반세기동안이나 간직되어온 우리 민족의 숙원이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이 절박한 민족적 숙원을 앞에 두고 이제는 누구도 빈말로 인민을 우롱해서는 안되며 대화를 가지고 민족의 운명을 희롱해서도 안된다.

조국통일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말보다 실천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세계가 공인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불변의 조국통일원칙으로 확인하고 이를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이 원칙을 구현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데 있다.

련합회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우리 민족은 이제 머지 않아 통일의 열망으로 부풀어오른 1980년대를 보내고 20세기의 마지막년대에 들어서게 된다.

1995년은 조국해방 50돛이 되는 력사적인 해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해야말로 더이상 조국통일의 과제를 넘겨서는 안될 중대한 력사의 계선으로 되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구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대결과 분렬의 역류를 이겨내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조국해방 50돐을 반드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위업을 성취하고 겨레의 숙망을 실현하는 력사적인 전환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련합회의는 통일조국의 탄생을 맞이할 력사의 그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온 민족이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련합회의는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는 아세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직접 련결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국 정부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는 끝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찬동밑에 새로운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의를 담은 편지를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 1990. 5. 31,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 정무원 연합회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채택

(로동신문, '90. 6. 2)

우리 민족은 지난 40여년동안 어느 한시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한때도 진정한 평화를 누려보지 못하였다.

오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대결과 분쟁이 가셔져도 조선반도에서만은 긴장상태가 나날이 격화되고있다.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은 귀중한 나라의 재부를 서로 대결에 소모하면서 너무도 오랜 세월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불안한 정세속에서 살고있다.

대결과 전쟁은 북에도 남에도 리로울것이 없다.

북과 남은 날을 따라 가중되고있는 대결과 전쟁위험을 더이상 방관시해서도 안되며 수십년동안 민족의 머리위에 무겁게 드리워져있는 핵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위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주저해서도 안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는 그 누가 선사하지 않으며 더우기 빈말로는 결코 이룩할수 없다.

우리 민족은 자신의 노력으로 나라의 평화를 쟁취하고 우리 나라가 외세의 각축장으로, 참혹한 핵전쟁마당으로 되는것을 피하여야 하며 세계가 어떤 동란을 겪는다 해도 우리 나라에서만은 어떻게 하나 온 겨레가 자주적인 통일조국에서 평화를 누리며 화목하게 살아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현 시점에서 우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가침선언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을데 대하여 확약하는 동시에 그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를 예견하여야 할 것이다.

불가침선언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북과 남의 대폭적인 군축을 실현하는것이다.

군축을 하지 않고서는 북과 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할수 없고 통일을 위한 대화도 성공시켜나갈수 없으며 협력과 교류도 실현할수 없고 나라의 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북과 남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낳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대결과 군비경쟁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겨레의 념원과 국제적추세에 맞게 대폭적인 단계적군축을 실현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는 이미 1988년 11월에 내놓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현실적조건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군축방안을 천명한다.

#### △북남신뢰조성

1.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한다.

- ① 외국군대와외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 ② 사단급이상 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 ③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 ④ 자기 령내(領內)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⑤ 군사연습을 사전에 호상 통보한다.

2.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 ① 비무장지대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한다.

- ② 비무장지대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한다.
- ③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도록 한다.

3. 북과 남은 우발적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① 쌍방 고위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 ②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 군사적도발행위를 금지한다.

△ 북남무력축감

4.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① 병력축감은 쌍방사이에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명선으로, 둘째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명선으로 축소하며 세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명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폐기한다.
- ③ 정규무력축감의 첫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한다.

5.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갱신을 중지한다.

- ① 새로운 군사 기술, 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을 중지한다.
- ②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는다.

6. 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 ① 무력축감정형을 호상 상대측에 통지한다.
- ②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리행정형을 검증한다.

### △ 외국무력의 철수

7.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든다.

① 남조선에 배비(配備)된 모든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핵무기를 생산, 구입하지 않는다.

③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비행기, 함선의 조선경내(境內)에로의 출입과 통과를 금지한다.

8.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① 남조선주둔 미군과 그 장비들이 북남무력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철수되도록 한다.

② 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남조선에 설치된 미군사기지들도 단계적으로 철폐되도록 한다.

### △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9. 북과 남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할수 있다.

② 군비통제와 북남사이에 있을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군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0. 북과 남은 협상을 통하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인 군축에 합의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평화보장의 주되는 당사자인것만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조  
미회담이나 3자회담에 반드시 나와야 할것이다.

1990년 5월 31일

평 양

○ 1990. 6. 2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병수 기자회견

(평양, 90. 6.27, 21:0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에서 우리의 새로운 군축제안과 관련한 문제를 통보하는 모임이 27일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장소 정면에는 우리 당,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평양시내 신문, 통신, 방송 등 출판보도부분 기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주재 대사관 출판관계일군들과 특파기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안병수 국장이 발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5월31일날에 새로운 군축방안을 내놓은 때부터 이제 근 한달이 되어웁니다. 그동안에 지금 내외의 반향들을 보면 우리의 새로운 군축방안이 매우 시기적절하고 정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군축방안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군축방안에서 우리가 주목을 돌려야 할 몇가지 문제들, 그리고 끝으로 이 군축방안에 대한 내외의 반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 새로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새로운 군축제안은 1990년대 통일을 위한 첫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안팎의 정세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매우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과 남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고 통일운동이 대단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주세력의 진출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보아도 평화와 완화에로 나아가고 있는 정세발전추세는 우리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이런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고, 특히 분열된 나라들에서 통일과정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는 데 고무적인 이런 작용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와 최근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1990년대를 통일의 년대로 할데 대한 이런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1990년대 통일의 성취여부는 바로 이런 데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하는가, 못하는가는 바로 지금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군축제안은 90년대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발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번 새로운 군축제안의 의의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를 완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는 데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떠나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반도의 평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한 기본고리이며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보장하자면 우선 조선반도의 평화부터 실현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군축제안은 조선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군축제안의 의의를 생각해 볼때 북남군축협상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의 각계에서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군사문제를 외면하고 있는데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지금 매우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 세계적인 군축추세도 남조선당국자들을 지금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보다 신축성있는 이런 군축방안을 제의한 것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군축문제 토의에 응해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물론 우리의 군축제안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더는 외면할 수 없고 또 그들이 군축문제 협의에 응해나오는 것은 이제는 시간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군축제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할, 주목을 해야 할 몇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로운 군축제안도 역시 이미 우리가 88년 11월7일에 제기한 포괄적인 군축방안, 여기에서 천명한 평화보장 4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통일지향, 남북군축, 외군철수, 당사자협상, 이런 4대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내놓은 군축방안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군축방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의 군축제안이 나라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또 평화문제를 최단기간내에 해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군축제안은 남조선당국에서 이리저리하게 단편적으로 내놓고 있는 이른바 평화제안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북과 남은 지금 각각 다 불가침선언 채택, 또는 불가침조약 체결,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다 서로 불가침을 약속하자는 것인데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남조선에서 주장하는 불가침조약은 남북의 현상태를 호상 인정하고 호상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해서 확약하자는, 약속하자는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불가침선언, 이것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리가 예견하는 이 불가침선언, 이것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과 남의 불가침을 확약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북남군축, 외국군대철수와 같은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가침선언만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군축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철저한 군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축방안에는 지금 쌍방무력을 궁극적으로 10만이하로 줄일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민간무력도 완전히 해체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축제안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쌍방이 납득할 만한 검증과 사후보장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서도 명백히 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측 군축정형에 대해서 호상 현지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비무장지대안에 중립국감시군도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또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서 쌍방의 총참모장을 책임자로 하는 <군사공동위원회>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 및 보장장치는 비록 오늘 북과 남이 서로 불신을 하고 있는 이런 조건이지만 능히 군축을 담보있게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군축을 단계별로 하되 최단기간내에 그것을 실현 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쌍방이 합의한 때로부터 3~4년안에 군축을 실현하고 미군무력도 그에 상응하게 철수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이 새로운 군축제안에 반영되고 있는 우리의 신축성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의 군축방안에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종래에 주장해온 문제들이 적지 않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남조선측이 제기하는 신뢰조성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북남신뢰조성이라는 항목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군축제안에서 이 신뢰조성이라는 것을 별도로 제기한 일도 없고, 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군사연습의 사전통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들, 그리고 쌍방 군사당국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와 같은 이런 문제들은 다 남조선측의 주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의 우리의 군축제안이나 평화제안에 대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표시한 이러저러한 불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도 고려해서 북남군축과 미군철거를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고 또 검증문제와 평화보장 조치에 대해서도 이번에 충분히 밝혔습니다.

다음 셋째로,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군축제안에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북과 남의 자주적인 노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서 기본장애는 미국이고, 따라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와 남조선, 미국사이의 3자회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3자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재 형편에서, 또 조미회담에도 지금 응하려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비록 해야할 점은 있지만 북과 남 사이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우리는 3자회담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론 뒤에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한편 북남사이에서 문제의 해결방도를 적극 모

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축제안의 서두에는 우리의 민족이 자신의 노력으로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시점에서 우선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또 불가침을 담보하기 위해서 북남군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반도에 대한 외국무력의 간섭과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군축제안에서는 남조선에 있는 미군과 그의 핵무기를 철수할데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나가서 미국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폭넓게 예견했습니다.

끝으로 이번의 새로운 군축방안에 대해서 지금 반향들이 어떤가 하는데 대해서 남조선에서의 반향을 중심으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군축방안은 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은 우리의 새 군축제안이 군축과 완화를 리행하는 오늘의 시대적 흐름과 부합되는 정당한 조치로 된다고 하면서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평화노력에 대해서 련대성과 지지를 표시해 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특히 남조선에서의 반향입니다. 지금 새 군축제안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군축제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해서 남조선에서는 군축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각계인사 수백명은 지난 6월15일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남조선당국은 북이 제기한 평화실현방안과 군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평화협정체결과 불가침선언, 핵무기의 철거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을 실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의 군축제안에 고무돼서 평화와 군축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군축제안에 대해서 남조선의 정계상층과 당국이 이례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정계상층인사들은 지금까지의 어느 군축안보다도 수용가능성이 있는 안을 내놓았다, 진정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군축제안이 그 정당성으로 해서 남조선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측에 합리적인 군축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남조선측이 오래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듭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평화제안에 대해서 대답을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군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서 어떠한 가능성이 열리겠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평화애호적이며 통일지향적인 입장에 서서 우리의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에서 우리의 새로운 군축제안과 관련한 문제를 통보하는 모임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3) 南北軍縮관련 주요 報道內容

○ 1990. 2. 8, 외무부, 「안보정책실무대책단」 구성 발표

(2. 8자, 동아일보)

- 정부는 주한미군철수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남북한간의 군사적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해 군축 (군비통제)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방침을 정하고 국무총리산하에 외무부·국방부·통일원·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 고위실무자들로 구성된 「안보정책실무대책단」을 구성했음.

○ 1990. 2. 8, 「루이스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 미의회증언, “주한미군 일방철군 땀 「힘의 공백」초래”

(2.10자, 서울신문)

- 지난해 12월말 현재 병력수가 4만 3천 7백19명인 주한미군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심적인 안정요소로서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는 「힘의 공백」을 만들 것이며, 이 공백은 다른 나라들이 채우려 들것인바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은 엉망이돼 세계적 문제를 파생시킬 것임.
- 아·태지역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고, 한반도 휴전을 유지하며, 미군에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일본안보를 확고히 해주고 있음.

○ 1990. 2. 26,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 국회본회의 연설시 「남북군축협상 본격화」표명  
(2.27자, 한국일보)

-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고 통일을 향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시작해야 함. 세계의 「탈이념화·탈냉전화」 조류에 맞추어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경제교류는 물론, 군축협상도 본격화 해야 함.

○ 1990. 3. 2, 강영훈 국무총리, 국회대정부질문 답변시 「남북군비통제 3단계방안」준비  
시사

(3. 3자, 서울신문)

- 남북군비통제와 관련, 우리정부는 안보모험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남북의 군비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 <상호신뢰구축→군비제한→군비축소>라는 3단계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음.
- 우리측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사관계관 회의를 의제로 제안해 놓고 있으며 고위급회담이 진전되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군비통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군사력 공동평가단」의 구성도 그 때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문제는 남북한간의 군사력불균형 시정노력 및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함. 따라서 북한측이 이같은 군사력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자세를 보일 경우, 우리도 주한미군감축 등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1990. 4. 19, 미국방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개요」제하 보고서 미의회 제출

(4.21자, 한국일보)

〈 한반도관련 보고내용 (요지) 〉

- 미국방부는 향후 10년동안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병력을 감축·개편 및 역할을 재조정하며, 한반도방위의 주역할을 한국군에 이양
- 한·미양국의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 한국은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의 상당량 증액부담 불가피
- 군축문제와 관련, 아시아에서는 유럽식군축이 비현실적이지만 한반도의 경우 신뢰구축조치와 병행한 유럽식군축방안 원용가능
- 미국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조치 및 북한의 남북대화참여를 계속촉구, 군사훈련참관단 교환 등 쌍방의 신뢰구축협상 가능확신
- 동서간 긴장완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추구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상존하고 있으나 일련의 신뢰구축조치에 의한 긴장완화, 또는 평화통일에 대한 진전은 가능

〈 3단계 주한미군 감축계획 (요지) 〉

- 제1단계 (1990년~1992년)
  - 행정간접비용 절감, 한국군이 맡을 수 있는 일부 임무의 이양을 통해 기존군사력 효율화
  - 보병2사단전력의 현대화로 일부 재조정이 불가피하나 주요병력인 2사단의 전투능력은 그대로 유지

- 92년까지 공군2천명과 지상군5천명 등 도합 7천명정도의 병력감축
- 북한의 위협 재평가 및 1단계 실적을 점검, 2단계의 새목표 설정

○ 제2단계 (1993~1995년 또는 1993~1997년)

- 2사단 병력규모의 재조정 및 감축
- 감축규모는 남북한관계 및 한국군 전력증강정도에 좌우되며 미국의 억지력과 의도를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

○ 제3단계 (1996~2000년 또는 1998~2000년)

-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군은 지원·보조역할 수행
- 억지력유지에 필수적인 미군주둔 규모를 더욱 줄이고 여타병력은 철수고려

\* 상기 보고서는 공산주의의 붕괴 및 전쟁위험감소, 미국내 국방비삭감 여론 등 새로운 정세변화에 따라 미국방부가 작성하여 미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

○ 1990. 6. 10, “정부, 남북군축방안 「우리측 시안」마련중” 보도

(6. 11자, 한국일보)

- 정부가 마련한 유럽식 군축모델을 기초로 한 이 방안은 남북한간에 일단 군사적 신뢰조치를 구축한 이후 탱크·잠수함 등 공격용병기를 제한·폐기하며, 양측 병력을 통일후 인구의 1%선이 될 수 있도록 균형감축한다는 단계적 방식을 포함하고 있음.

-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현재 예비회담이 진행중인 남북고위급회담 (총리회담) 본회담에서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며, 이 회담에서 합의되는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을 함께 제의할 계획임.

○ 1990. 6. 15, 재야인사 312명, 「한반도군축과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발표

(6.24자, 한겨레신문)

< 남한 정부당국에게 >

- 1) 북한의 「포괄적 평화방안」과 「한반도평화 군축방안」을 검토, 평화협정 · 불가침선언, 핵무기철폐 ·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 작전명령권이양, 남북간군비감축 · 상호통제 내용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 실현방안 · 일정 조속마련
- 2)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이나 정상회담, 정치군사회담 등을 추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인접국가들과의 회담 · 협상의 즉각적 전개 및 민간차원에서의 대화와 교류 · 방문 병행
- 3) 남한당국은 북한의 개방촉구와 동시에 스스로 경직된 사고 · 자세를 전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및 문익환 · 문규현 · 임수경 등을 민족화해차원에서 즉시 석방

< 북한 정부당국에게 >

- 1) 북한당국은 독자적 핵무기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실현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만약 개발을 추진중이라면 이를 즉시 중지하고 핵

안전협정에 조인하여 한반도전체의 비핵지대화에 공헌

- 2)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필수적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체결에는 휴전협정에 조인한 미국과 북한뿐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고 평화에 책임을 져야 할 남한쪽이 동참해야 하며 따라서 북한은 「3자회담」과 함께 「남북당국자회담」도 수용
- 3) 북한당국은 민족간의 대화와 신뢰형성을 위해 군사문제의 완전해결 전이라도 남북이산가족의 교환방문실현 및 경제적 교류·합작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따라서 정치군사분야와 비정치적·인도적차원의 대화·교류 병행추구

〈 미국 정부당국에게 〉

- 1) 미국정부는 한반도의 분단과 분단체제 지속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분단과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대한반도정책 즉각 강구
- 2)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가 필수조건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핵무기 즉각철거, 평화협정체결, 작전권이양 및 주한미군철수 실현과제 조속이행
- 3)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환태평양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대한군사판매계획을 한반도평화 실현방안에 맞추어 시정

○ 1990. 6.17,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 “북한 6개월내 핵보유 가능성” 보도  
(6.18자, 한국일보)

- 소련관리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거의 성공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 6개월이내에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은 동독과 루마니아 전 공산정권들로부터 핵개발 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민감한 핵물질들을 확보해온 것으로 밝혀졌음.

○ 1990. 6. 26, 홍성철 통일원장관, 국회대정부질문 답변시 「남북불가침협정」 추진시사  
(6.27자, 서울신문)

-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개선에 대비, 정부는 남북한이 현경계선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정치질서를 인정, 상호불간섭 등의 내용을 골자로 「불가침협정」안을 마련중에 있음.
- 「불가침협정」안에는 현 경계선의 존중과 상대방 정치·사회질서인정(상호불간섭), 무력불사용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의 국제적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북한의 군축제의를 종래의 대남전략면에서 달라진게 없음. 정부는 북한의 제의중 생산적인 것은 적극 수용할 방침이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축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